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NO.3



아프리카 ODA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시사점

EDCF의 베트남 개발 기여도에 관한 실증 분석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and KSP)의 개최 결과 및 의의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7년 제3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17년 12월

발행인 : 은성수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김태수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03 아프리카 ODA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김용빈 개발마케팅연구소장)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27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석창민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심사역)

III. 한국의 개발협력

65 EDCF의 베트남 개발 기여도에 관한 실증 분석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치록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안지연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99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Shaping
the Future with EDCF and KSP)의 개최 결과 및 의의

(안주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113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은경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133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EDCF

I . 국제개발협력 동향

아프리카 ODA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김용빈 개발마케팅연구소장

아프리카 ODA에는 변화가 필요하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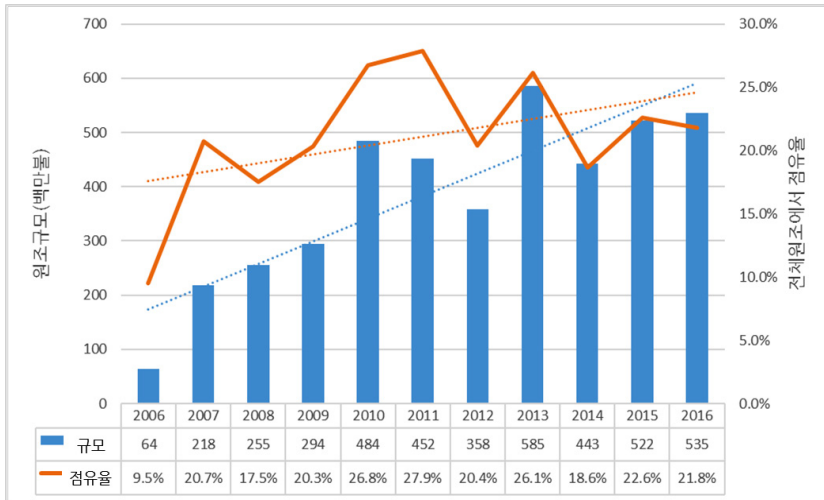
김용빈
개발마케팅연구소장

1. 서론 :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ODA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향상에 주력할 때다

2006~2016년 사이에 우리 원조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프리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아시아는 2006년 68.7%에서 2016년에는 57.3%로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는 2006년 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에는 21.8%에 도달하였다.

1) 이 글은 2015. 9. 22. 한-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주관으로 열린 '바람직한 한-아프리카 협력의 길 모색' 포럼에서 저자가 토론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대아프리카 원조공여 추이 - 양자간 지역별 약정액 기준
(백만불)



출처: ODA Korea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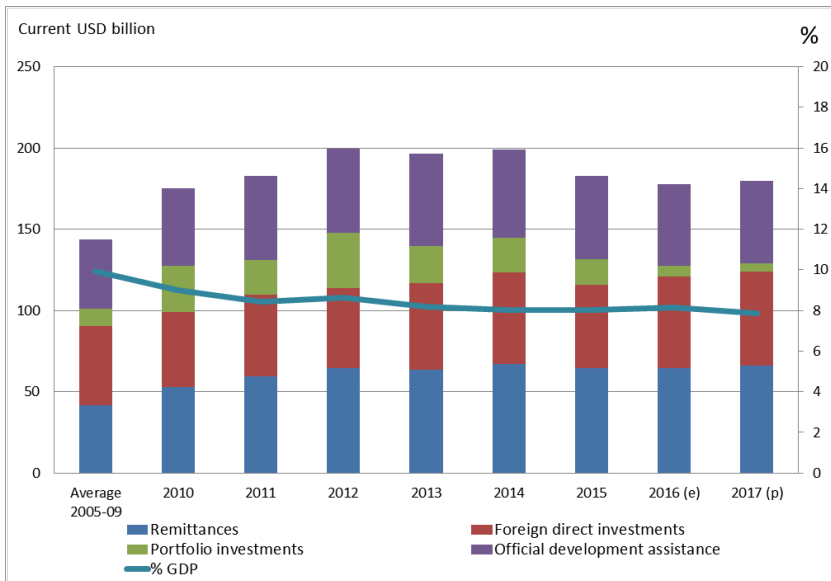
이는 DAC 회원국 평균(2015년 기준)인 아프리카 28.7%, 아시아 24.7%과 비교할 때, 아직도 아시아 편중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식민지배 역사라는 서구 공여국들의 배경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원조 비중이 턱없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절대 원조금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2010년에 공표한 GNI 대비 0.25% 규모로 원조를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0년까지 0.20%를 달성하기로 하향 수정되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지키기 쉬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서 그 어느 때보다 원조 효과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이 때, 우리 아프리카 원조에 있어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꾀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개발의 역동성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온다

〈그림 2〉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외부재원의 현황



출처: African Economy Outlook 2017

2017년 기준 아프리카에 유입되는 ODA는 509억불에 불과하나, 외국인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자국민송금이 포함 1,289억불에 달하여, 이제 아프리카에 유입되는 자금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 뿐이다. ODA 증가세는 정체된 상황에서 민간 현금흐름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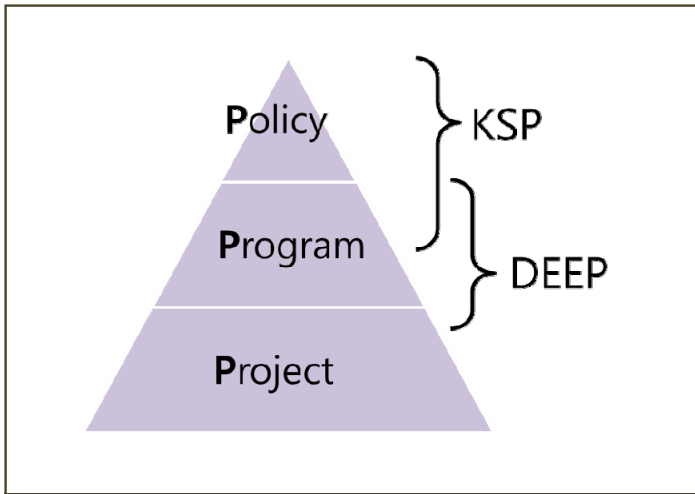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줄어들만큼 외국인직접 투자가 늘고 있고, 자국민송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추세는 더욱더 심화하여 조만간 ODA가 아프리카로 향하는 현금흐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ODA가 지향해야 할 전략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서구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 잘 모른다. 원조규모도 작다. 그러나, 빈곤한 상태에서의 외자도입과 산업개발 등에 관한 경험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이 비교우위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여야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수원국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KSP/DEEP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개발을 위해 물리적, 제도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마련된 재원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등 주로 정책(Policy)과 프로그램(Program) 수준에서 수원국에 대해 컨설팅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3〉

원조사업의 계층구조



출처: 저자 작성

이제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사업(Project) 수준에서도 이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발전경험’을 프로젝트 수준에서 수원국에 유익하게 전달하려면, 관점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II. 관점의 변화: 우리는 빈곤의 결과와 싸우고 있다

우리 원조는 교육과 보건분야에 치우쳐 있다

우리는 원조 분야를 지원하는데 도식적인 분류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최빈국이 다수 위치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보건 및

식수개발,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북아프리카에는 정보통신,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최빈국은 BHN(Basic Human Needs)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오래된 편견으로 인해 원조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과 보건이다.

교육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는 특히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는 직업훈련원의 입지가 좋지 않다거나, 수행기관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그런 피상적인 이유에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조달한 재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실물 투자가 선행되고,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교육 수요를 외부화하여 정부가 떠안은 역사를 가졌다. 이것이 각종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등의 효시이다. 그런데, 현재 아프리카에는 실물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수요 없는 직업훈련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직업훈련 사업이 사업기간 종료후 얼마있지 않아 곧바로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국은 자동차 정비기술 훈련원보다 정비공장을 원하고 있다. 정비기술 훈련원은 장래 시장수요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기술인력 배출에 노력하지만, 정비공장은 확실하고도 직접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한다.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 개발협력계에서는 이렇게 ‘상업성 있는(commercially viable)’ 사업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풍조가 있어왔다. 그러나, 영국의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인 CDC(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는 주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상가의 건설과 운영자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각국에 설립하거나 투자해 둔 사모펀드(PE, Private Equity)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1) Growing business, creating jobs, 2) Focus on Africa and South Asia, 3) Making a lasting difference 라는 명료한 목적을 기준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도시에 최신식 의료설비를 갖춘 수백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설한 후, 현지의 의료인력과 운영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를 위해 다시 한국 의료인력 파견이나 현지인력의 연수초청 사업을 벌이지만, 이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대규모 의료시스템을 유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없어서 벌어진 현상을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 서비스를 최소한의 적정가격에 구매해줄 정부와 민간의 구매력이 갖춰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대규모 의료시설 공여를 지양하여야 한다.

또,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사인(死因) 가운데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 등 심각한 질병은 매우 적다. 아프리카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대부분은 직접 원인으로서는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와 수인성 질병이 주류를 이루며, 공통적인 간접 원인으로서는 불량한 영양 상태를 들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면 어디서나에서 볼 수 있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대도시에 대규모 병원을 지어주는 것은 소수의 수혜자에게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더군다나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타당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원조다. 같은 원조규모라면 한 지역에 보건소 수십 개를 세울 수 있다. 또, 현지 주민을 선발하여 1년 정도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 보건소장을 양성할 수 있다. 식수 관리, 방역, 위생교육, 위급상황 대처 등을 교육받은 보건소장의 경우라면 의사와는 달리 두뇌유출(brain-drain)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현장밀착형으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보수교육과 소모성 물품지원이 의미가 있어진다.

III. 행동의 변화: 빈곤의 원인과 대결하자

1. 사업은 충분히 도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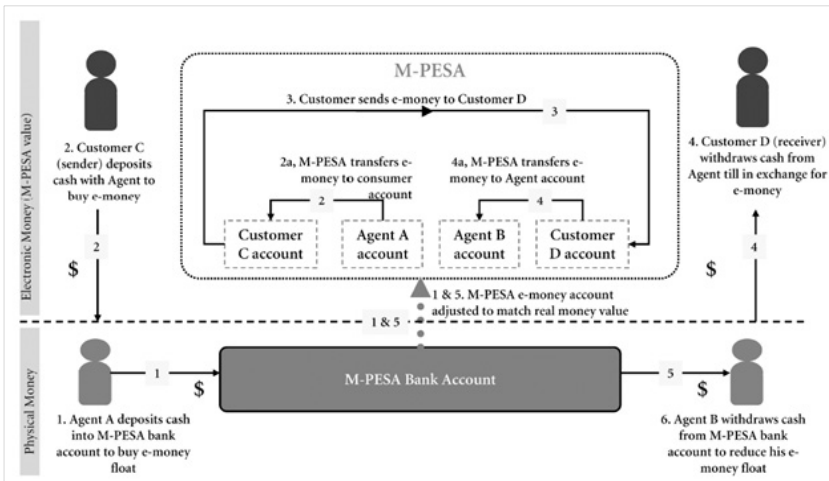
케냐 M-PESA 사례

케냐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Fintech의 효시로 불리는 M-PESA 서비스가 있다. 선불로 사는 통화권(credit)을 통화로 삼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은행망이 없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다수 현지인들의 불편함과 최대 18%에 달하던 송금수수료를 1%대로 낮춘 획기적 서비스다. 수수료를 아껴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편익이 매월 1억불 어치가 넘는다는 추정치가 나올 만큼 성공적이다. 단순한 송금 편의뿐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현금직접지원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 케냐에 주어지는 어떤 원조사업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영국 Vodafone의 현지 합작투자사인 Safaricom의 상용 서비스를 원조사업 효과와 연결지어 언급하는 것은, 이 사업의 제도화가 다른 아닌 영국 원조기관 DFID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4〉 M-PESA의 사업 모델



출처: <http://cs.stanford.edu/>에서 재인용

이 사업의 기본 아이디어는 현지인들이 부족한 금융망 인프라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 열악한 현실과 현지인들의 극복 노력을 간파한 DFID가 사업 모델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면서 이 사업은 경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주변국으로 동일한 모델이 전파됨은 물론, 급여를 이동전화로 이체함으로써 지급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 화폐의 순환속도와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ICT 분야에 특기가 있다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서 ICT분야 ODA 사업에서 이만한 혁신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원조사업은 통신 인프라나 전자정부 위주의 프로젝트 사업, 정책자문, 초청연수, 자원 봉사단 파견 등 전형적인 사업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조는 이래야 한다는 경계를 너무 의식하면 혁신은 이루기 어렵다. 단 하나의 원칙, 원조는 수혜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만 하면 된다는 원칙에 집중하여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을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2. 같은 방식이라도 현지 기관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야 한다

세네갈 JICA 미곡도정공장(RPC) 지원펀드 사례

혁신이 꼭 기술(technology)여야 할 필요는 없다. 관건은 빈곤퇴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현지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JICA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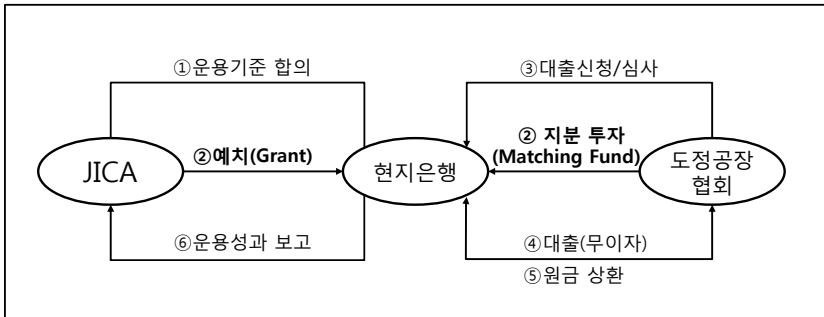
JICA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현지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일부 전환하였다. 이 방식은 원조기관의 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장점도 있지만, 현지 기관에게 자금운용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친개발적’ 측면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네갈 북부 쌀 도정공장 소유주 공동체인 북부쌀재배자협회(North Rice Farmers Association, ARN)는 JICA와 협력중인 현지은행의 위탁 계정(Escrow Account)전체 약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matching fund 방식으로 예치해 둔다. 같은 계정에 JICA는 나머지 80%의 무상원조 자금을 예치한다. 은행은 기존 도정공장에서 필요한 운영자금 (미곡수매, 연료, 전기, 가스 등)을 무이자로 대출하며, 회수된 원금은 다른 사업에 다시 대출된다. 즉, 공여자금은 대출회수율과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 점차 다소 줄어들게 되지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이 사업은 JICA가 AfDB와 함께 운영중인 EPSA Initiative (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의 일부인 “Rice Productivity Improvement Project” 이며,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21개의 도정공장 설비 개수를 지원하였다.

EPISA Initiative (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는 주로 인프라나 산업시설에 대한 직접대출이나 현지 상업은행에 대한 전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TA)은 무상으로 공여된다. JICA 특유의 Private Sector Investment Fund(PSIF) 방식으로 운영되어 비정부 민간사업(Non-Sovereignty Operations)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투자를 한다.

〈그림 5〉 JICA의 세네갈 RPC 지원펀드 운영 개념



출처: 2015년 5월 현지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PC(미곡도정시설)와 같이 여러 공정을 거치는 기계설비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설비가 가진 내구연한이 다른데, 어느 한 설비만 가동을 멈추어도 전체 사업장이 정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RPC를 원조 사업으로 공여한 후 5~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설비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데, 원조기관의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나 공사업체의 보증기간(warranty)이 이미 경과한 이후라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지속적인 가동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빈발한다.

이런 현지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였다는 것 외에도, 사업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요자금의 20%를 펀드에 지분으로 투자하게 하였다는 점과 특히, 현지 금융기관의 심사, 집행, 사후관리 등 운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원조기관 관점에서 볼 때도 사업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현지 금융기관이 합의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원조기관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소규모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원조기관에서 일일이 검토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이 방식은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계 NGO 원조로 지어진 RPC 사업장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설비인 선별기를 앞서 설명한 JICA의 RPC지원펀드 자금으로 개수한 바, 현지 주민 및 사업 운영자들이 마치 전체 사업을 JICA에서 지원한 것처럼 느낀다는 소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상당기간 생산성이 낮거나 아예 정지된 사업을 정상화한 JICA 지원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다.

KOICA 우간다 '망고펀드'와 비교

KOICA도 2015년 들어 사회적경제 방식을 개발협력에 도입하는 일환으로서 우간다에서 활동중인 망고펀드(MANGO FUND)와 함께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 사업’을 2015~2018 3년에 걸쳐 50만불 규모로 시행한다. 망고펀드는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법인으로, 우간다 지부를 통해 동아프리카 지역 임팩트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망고펀드는 우간다 내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우며 임팩트투자 펀드를 운영하여 현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기업별로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t)을 제공하는 등 역량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KOICA는 사업기간 3년 동안 우간다 내 36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표 1〉 JICA RPC 지원펀드와 KOICA-망고펀드 비교

구 분	JICA RPC 지원펀드	KOICA-망고펀드
지원규모	5-10만불/건	5천-5만불/건(평균 약1만4천불)
운용기관	현지은행	미국계 NGO 현지 지부
지원대상	도정공장	일반 중소기업

출처: 저자 작성

JICA RPC 펀드와 KOICA 망고펀드를 비교해보면,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개발의제를 달성한다는 기본 목적은 같으나 운영 개념상 2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망고펀드의 건당 지원규모가 계획상으로 건당 1만4천불, 현재 까지 집행된 사업으로만 볼 때에도 평균 2만불이 되지 않는다. JICA RPC 펀드에 비해 많이 작다. 이는 우간다의 미숙한 시장 성숙도를

감안하여도 의미있는 규모의 대출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둘째, JICA는 자금운용을 현지은행에 맡기고 있는데 반하여 KOICA는 망고펀드라는 외국계 NGO에 맡기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해외에서 임팩트투자 사업을 운용해 본 경험이 일천하므로 선진국 NGO에 위임하는 3각협력 방식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개발협력 사업은 그 실행과정 자체가 수원국의 역량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현지 민간조직을 실행과정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JICA RPC 지원펀드가 쌀가공-유통이라는 핵심분야를 파고드는 반면, 망고펀드는 지원대상인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출할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펀드의 색채가 모호하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3. 개발효과만 있다면 사업구도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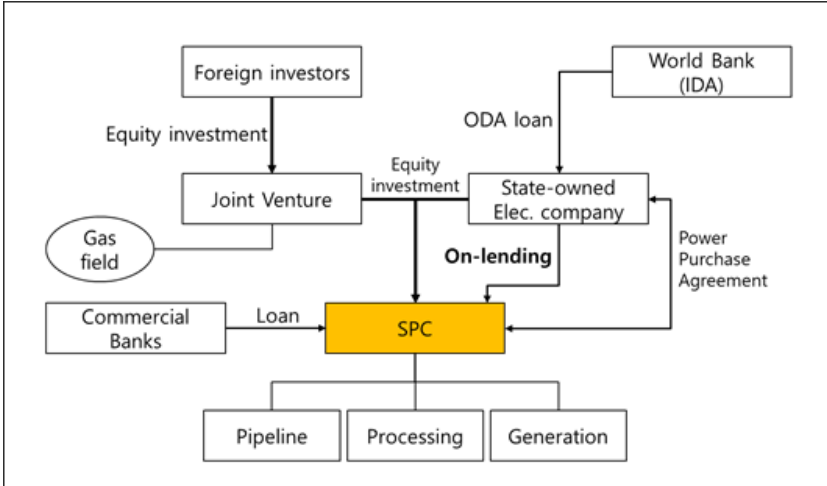
1) 민관협력(PPP) 사업에 ODA를 레버리지로 적절하게 활용한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199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사업주도 능력이 부족한 현지 정부를 대신해 MDBs에서 각종 위험을 부담하면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는데도 ODA 재원이 활용되었다.

탄자니아 Songo-Songo 사업 사례

Songo-Songo 사업은 탄자니아 연안에서 생산된 가스를 연료로 발전을 하는 전형적인 독립발전(IPP, Independent Power Provider) 사업이다. 1990년대말 미국계 발전사업자인 AES사가 개발하였으나, 수익이 투자기준에 비해 다소 부족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 IDA에서 현지전력공사(TANESCO)에 원조차관을 공여하고, 현지전력공사는 발전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재대출(On-lending) 해 주었다. 이로써 SPC는 금융조달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사업성이 회복되면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이 재개되었다.

〈그림 6〉 탄자니아 Songo-Songo 프로젝트 사업 모델



출처: World Bank의 사업문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런 식으로 운영사업자가 정해진 구조를 가진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 사업의 규모와 속성상 대기업이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2015년에 들어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에 위 사업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EDCF로 73백만불을 지원을 하면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점이라면 현지정부가 원조로 공여된 자금을 SPC에 대여하느냐 지분으로 투자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이런 방식이 더욱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직접 FDI를 유인하는 방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ODA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는 주로 인프라나 제도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간접적 접근이 대세였다. 그러나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의 투자효과 보다는 특정 FDI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ODA를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말리 설탕공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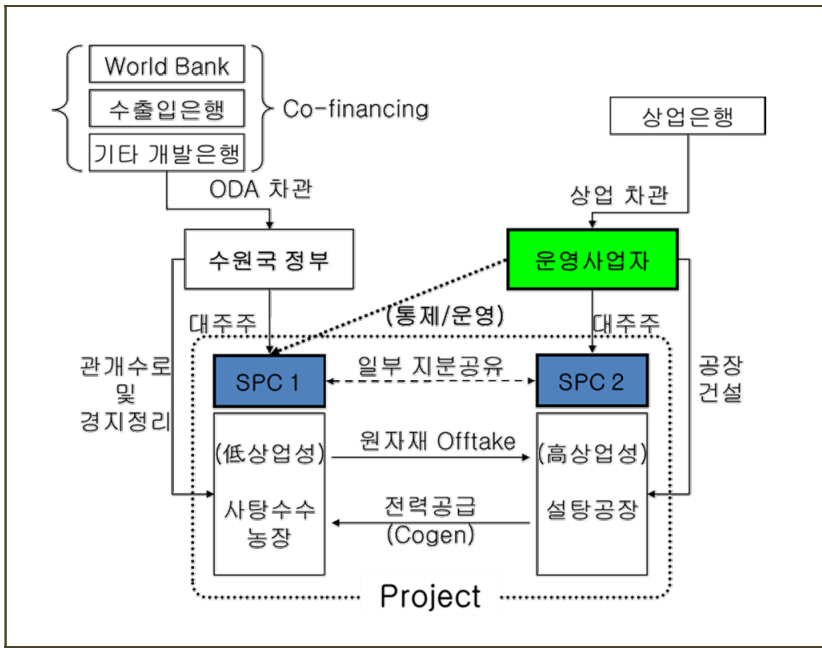
북서아프리카의 전형적인 내륙 빈곤국인 말리(Mali)는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인 설탕이 부족하다. 수년 전, 남아공의 제당회사에서 설탕공장을 건설,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체적으로 추정된 투자이익률은 IRR을 기준으로 대략 20%가 넘는다. 설탕공장 운영에는 원자재인 사탕수수를 키워낼 농장이 필수적이나, 사탕수수 농장 건설에도 관개수로 등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사탕수수 농장의 투자이익률은 5% 안팎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농장과 공장에 모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이 커질 뿐 아니라 가중평균한 이익률이 10%정도로 낮아진다. 주변국 시장이자율이 그 정도인 남아공 투자자로서는 투자할 매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리 정부가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양자 원조기관으로부터 ODA 차관을 받아 사탕수수 농장 인프라를 갖춘다. 대출이자율은 취급수수료 등을 포함해 1%가 채 되지 않는다. 설탕공장에서는 사탕수수를 전량 구매하므로 말리 정부 입장에서는 1%의 금융비용을 들여 5%의 '확실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결국, ODA 자금으로 수행한 이 투자가 결국 설탕공장을 건설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 것이 된다.

<그림 7>

말리 설탕공장 사업 모델



출처: 사업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ODA + FDI 방식 사업의 임팩트

물론, 말리로서는 지역 농민들의 고용과 소득이 늘고, 설탕을 자급할 뿐 아니라 신규 세원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 주민의 소득이 늘면서 이동 취학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유병율과 사망율은 점차 낮아지고, 여성들이 학대받는 일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설탕공장 하나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

불행하게도 이 사업은 2012년 이슬람 원리주의 그룹이 말리 북부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런 모델이야말로 빈곤의 결과가 아닌 원인과 싸우는,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업 모델은 실존한다. 전쟁 등 다른 위험요인으로 인해 투자자가 포기할 수도 있고, 협조용자 과정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확한 가치사슬 분석과 이해관계자 구조화에 기초한 이 사업 모델은 옳다.

이런 방식에 대해 2가지 상반된 우려가 존재한다. 민간투자사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구도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험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원조기관의 심사자는 생산물이 판매되지 않을 시장위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운영위험을 비롯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나열하며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한다. 반대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다는 민간투자사가 나서면, 이번에는 시민사회 등에서 원조자금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어떤 공급자가 어떤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것은 ODA사업의 '고객'인 수원국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수원국에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가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잘 준비된 산업 투자에 ODA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사업에서라면 수원국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투자국과 투자기업의

고객이다. '건전한' 시장에서는 고객도 투자자도, 다른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성과 공공성의 모호한 경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혁신적 사업 개발에 나서야 한다.

IV. 결론 : 아프리카 ODA에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 의료계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3,40년간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한해 450억불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국립보건연구원(NHI, National Health Institute)이 있다. 단순히 재원을 많이 투입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성취를 다 설명할 수 없고, NHI 특유의 연구개발 관리 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바로 연구결과가 일정한 비율 이상 실패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를 문책한다는 원칙이다. 충분한 도전을 하지 않고 결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만 쫓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그 이유다. 실패가 없으면 한계와 방향을 시험하지 않은 것이고, 한계를 접해보지 않은 시도는 결국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원조사업은 어떠한가. 평가(evaluation)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떤 사업도 실패했다는 평가보고서가 없다. 이는 평가의 엄밀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안전 위주로만 임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전적인 사업을 목표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합리적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문화,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 대중의 오해를 정면으로 극복하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아프리카는 국제 원조사업의 주무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게 정해진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된다.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에 혁신적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일부 분야에서만이라도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혁신은 일정 정도 실패를 감수해야 성취할 수 있다. 또한 발전 지향적 평가제도에 이런 태도를 접목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그 시도가 우리 원조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도록 해야 한다.

MDGs가 SDGs로 바뀌는 거대담론의 변화는 사업(Project) 단계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론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는 원조에서 개발로 진화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빈곤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싸운다는 관점과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을 시도한다는 자세를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혁신이며, 우리 ODA가 제한된 자원과 부족한 경험을 극복할 주요한 방법론이다.

EDCF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석창민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심사역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석창민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심사역

I. 들어가며

국가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작용하며 공행(co-movement)하는 가운데 발전한다.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금융부문이 발전하고, 금융경제의 발전으로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거시경제활동 전반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실물발전이 금융발전을, 금융발전이 실물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특히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부문 대비 더딜 경우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는 금융억압¹⁾(Financial Repression)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²⁾으로, 금융발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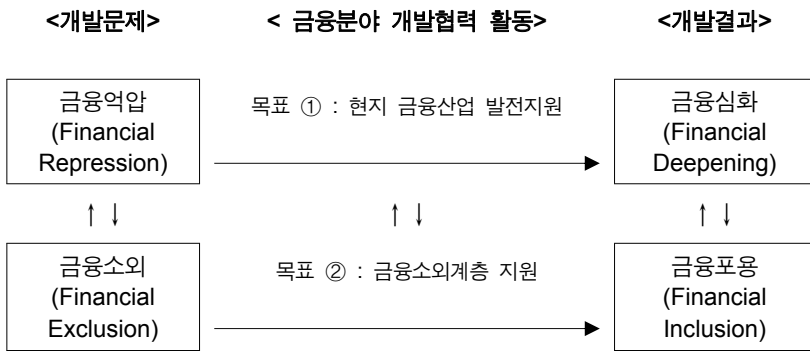
1) Shaw(1973) 등은 금융낙후가 실물경제의 성장을 제한하고, 실물경제의 저성장이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를 '금융억압'이라 정의한다. 예컨대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미하고 금융기관의 자본중개기능이 낮은 개도국의 대부자금시장은 만성적 초과수요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가계와 기업들이 자금을 적시 조달받지 못해 거시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활동이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부문의 낙후로 인해 제한된 개발도상국의 금융서비스는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결과 서민가계와 중소기업 등 소득이 낮고 신용이 약한 금융소외계층이 만성적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은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이 개발의 결과를 향유하는 친빈곤층 성장(Pro-poor Growth)을 실현한다는 의의가 있다. 요약컨대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은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즉 금융경제의 발전을 통하여 금융억압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실현, 즉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대표적으로 McKinnon(1973)은 명목 GDP 대비 총통화(M2) 비율을, Goldsmith(1969)는 국내총유형자산 대비 총금융자산 비율인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물경제 대비 금융경제의 발전이 더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림 1〉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의 의의



출처 : 저자 작성

이에 국제사회의 양·다자 공여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금융부문이 개발도상국의 각 실물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금융소외와 금융포용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금융시스템 발전(Financial System Development) 지원과 공공·민간부문 대상 유동성 지원으로 대표되는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은 전통적으로 협력국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활동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유상자금협력을 활발하게 수행 중인 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구들의 주도 하에 주택금융,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상호금융 등 특수금융의 활성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도국의 개발수요, 특히 민간부문의 성장과 함께 현지 민간기업 대상 중장기대출, 메자닌금융, 지분투자 등 장기·모험자본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양·다자 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DFI)들은 투·융자 방식을 활용한 개도국 앞 유동성 공급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단순한 유동성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 내 다양한 금융시장이 건전한 감독체계 하에서 육성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발전 지원활동 또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주요 양·다자 공여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금융부문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보건, 교육, ICT 등 수원국의 실물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적극적이거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대표적 무형 인프라인 금융부문 개발협력 활동에는 다소 소극적이며, 지원형태 역시 정책자문과 초청 워크숍 등이 대부분으로 개도국의 금융시스템 발전 지원 및 공공·민간부문 대상 유동성 지원 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제사회의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개관적으로 살펴본 후, 주요 양·다자 공여기관들의 금융분야 지원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우리 공여기관들의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타 기관들의 지원사례가 우리 개발협력 활동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한다.

II. 금융부문의 발전 및 제약요인

1. 금융경제의 구성³⁾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 무형인프라인 금융분야 개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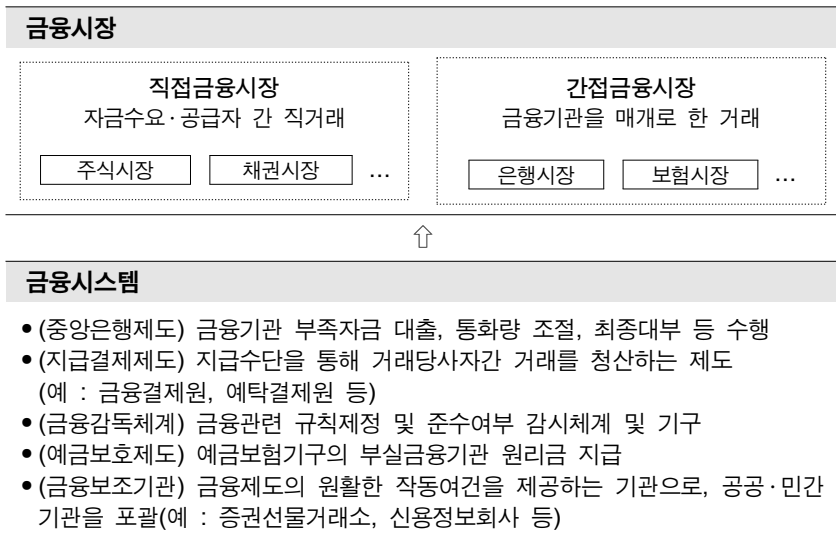
3) 본 절의 내용은 한국은행(2011) 등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활동은 곧 개발도상국 금융시스템의 구축 및 선진화를 돕고, 다양한 금융시장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로도 불리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및 감독하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통칭한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산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금융시스템이 금융기관의 효과적 영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총체라 정의하고, 그 예시로서 결제시스템(payment systems) 및 신용정보기관(credit information bureaus), 담보등기제도(collateral registry) 등 다양한 제도·기관 등은 물론 금융 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이에 포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⁴⁾. 한편 한국은행(2011) 역시 금융시스템이 크게 정책금리 결정 등을 통한 통화량 조절기능과 최종대부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제도, 자금거래 당사자들 간 거래의 설정 및 청산을 돕는 지급결제제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체계, 예금자 보호와 금융질서 안정 등을 위한 예금지급 보장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수행하는 예금보험제도, 신용정보회사,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제도 혹은 기관을 통칭하는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4) http://www.ifc.org/wps/wcm/connect/Industry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_Industries/Financial+Markets/Financial+Infrastructure/
(접속일 : 2017.11.24)

위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토대 하에 작용하는 금융시장은 자금의 효율적 유통과 자금거래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추상적 장소이며, 크게 자금 수요·공급자 간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 수요·공급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분류 하에서 금융시장은 주식·채권·은행·보험 등 금융상품에 따른 세부시장으로 구체화된다.

〈그림 2〉 금융경제의 구성 개관



출처 : 한국은행(20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특히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를 매개하고 신용을 창출하는 등 자금의 유통을 돕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금융기관은 크게 신용창출 여부에 따라 은행기관과 비은행기관으로 분류되며, 주택금융·농업금융

등 민간의 역할만으로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공익 목적의 특수 금융은 공공부문 주도의 특수(정책)금융기관이 설립되어 민간금융 부문의 역할을 지원 및 보완하고 있다.

〈표 1〉 금융기관의 분류 및 주요활동

분류		주요활동
은행 기관	상업은행	영리 목적의 금융 여·수신, 투자활동 등 수행
	소액대출기관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액자금을 無담보·보증 지원
	상호금융	조합원 상호간 자금유통(신협, 새마을금고 등)
	캐피탈/리스	구입물품을 대상으로 할부/리스 거래
非은행 기관	보험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증권사	증권·파생상품의 인수, 중개 및 자기매매 업무 등
	단자/종금사	국제금융, 보험 및 일반예금 제외 종합 금융업 수행
특수(정책)금융기관		공익 목적의 자금 공급 * 수은, 산은, 기은, 농협, 수협, 주택은행(주금공),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등

출처 : 한국은행(20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금융부문의 발전 및 제약요인

이렇듯 금융경제의 발전은 곧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관련 정책을 선진화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확보하는 “금융시스템 발전”, 또는 민간금융기관의 자금거래 중개 및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특수(정책)금융기관 운영을 통하여 시장활동을 지원 및 보완하는 “금융시장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낮고 역동성 또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발전

정도에 대한 프랑크(A. G. Frank) 등의 분류방식을 차용하여 개발도상국 금융경제의 발전정도를 도식화한다면 크게 미발전(un-developed) 단계와 저발전(under-developed)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미발전단계의 금융경제에서는 은행업 외 타 금융산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은행산업 역시 소수의 상업은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금융시장의 규모와 질이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절대적 유동성 부족은 물론이고 경제주체들의 소득과 신용이 낮아 거시경제의 전반적 위험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탓에 금융서비스가 일부 고소득층과 국내외 대기업 등에 편중되고 금융상품 역시 단기자금 위주로 제공되는 등 신용창출이 제한되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렇듯 저조한 금융시장의 이면에는 낙후된 금융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금융관련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 역시 미비한 등 공공부문의 역량강화가 절실한 상태이다.

한편, 저발전단계의 금융경제는 발전 초기의 금융경제를 지칭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금융시장의 양적규모 확대와 함께 금융감독 및 위기관리, 금융불평등 해소 등 금융시장의 질적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먼저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금융기관의 수가 확대되지만, 은행기관 대비 비은행기관의 발전이 더더 채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시장의 육성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시장 내 자금공급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영농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니즈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여신공급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 하는 가운데 이들 기관들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 기관의 연쇄도산 등 위기상황 관리를 위하여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분야 개혁 등을 위한 공공의 역량 강화가 대두되어 이와 관련된 금융시스템의 재정비 및 선진화 필요성이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인다.

III.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시사점

1. 개관

이렇듯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개발도상국의 금융분야 발전을 위하여 양·다자 공여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금융부문이 개발도상국의 각 실물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금융소외와 금융억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활동은 크게 ① 금융시스템의 육성, 구축 및 선진화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발전(Financial System Development) 지원활동과 ② 정부 및 공공·민간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금거래 증개 및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주택금융,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 금융 등 특수금융을 활성화하는 공공·민간 유동성 지원활동으로 구분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금지원의 규모와 방식 등 또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국제원조 통계를 제공하는 OECD 채권자통계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은 ‘경제 인프라·서비스(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s)’ 분야 내 ‘금융·재무서비스(Banking&Financial Services)⁵⁾’ 분야로 분류하여 금융분야 원조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최근 5년(2011-2015) 간 경제 인프라·서비스 지원액(약 1,826억불)의 13%에 해당하는 232억불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일부 DAC 공여국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즉 유상자금협력을 활발하게 수행 중인 공여국 및 국제 금융기구들의 대출 및 지분투자 지원활동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동 기관들이 현지 정부 및 금융기관의 개발금융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수원국의 만성적 자금부족 해결 및 금융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도국 민간부문의 성장과 함께 현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대출, 메자닌금융, 지분투자 등 장기·모험자본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양·다자 개발은행 및 개발금융기관(DFI) 등을 중심으로 한 투·융자 방식의 개도국 유동성 공급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날 동 기관들은 단순한 수원국 유동성 제공활동을 넘어 수원국의 자생적 금융시스템 구축을

5) 또한 OECD CRS는 ‘금융·재무서비스(Banking & Financial Services)’ 사업분야를 ① 금융 정책 및 행정관리(Financ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② 통화금융기관(monetary institution), ③정규금융기관(Formal sector financial intermediaries), ④ 준정규·비정규 금융기관(Informal-semi-formal financial intermediaries), ⑤ 금융 및 재무분야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 i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로 세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목표로 다양한 기술 및 자금협력활동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육성, 구축 및 선진화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발전(Financial System Development) 지원활동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 양·다자 공여기관의 금융분야 ODA 지원현황 ('11-'15년)

단위 : 백만불(총지출), 명목금액 기준

구 분	총지출	유상			무상	
		소 계	차관	지분투자		
총 계	23,255	18,203	14,845	3,358	5,051	
양 자	소 계	11,249	6,804	3,791	3,014	4,444
	독 일	5,871	5,326	3,352	1,974	545
	영 국	2,058	606	0	606	1,452
	미 국	713	0	0	0	713
	프랑스	351	297	297	0	54
	일 본	211	48	45	3	163
	한 국	9	0	0	0	9
	소 계	11,944	11,337	10,992	345	607
다 자	EU(EIB 대부분)	9,132	8,986	8,670	316	146
	World Bank	1,638	1,444	1,444	0	194
	ADB	756	666	666	0	90

주) 본 수치는 OECD CRS “은행·금융서비스(Banking & Financial Services)” 분야 총지출액 누계액('11-'15년)으로, 통계상 분야코드(purpose code)가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등으로 보고된 금융분야 지원사업 등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 OECD 통계보고시스템 (<http://stats.oecd.org>)

2. 주요 양·다자 기관 지원현황⁶⁾

1) 독일

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AC 공여국 중 금융분야 개발협력 지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11-'15년 간 OECD DAC 회원국의 금융분야 총지출액 중 약 52%에 달하는 58억불을 지원하였다. 독일의 개발협력 전담부처인 경제협력개발부(BMZ)는 금융시스템 개발(Financial systems development)을 경제개발부문 내 단독 분야로 인식하고, 금융시스템 개발의 주요 과제를 ①소액금융, ② 중소기업 및 농업금융, ③금융규제·감독, ④책임금융, ⑤녹색금융 등의 5대 과제로 분류하였다. 독일 내 원조시행기관들은 이러한 정책당국의 지원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협력(Financial Cooperation) 전담기관인 KfW 개발은행과 KfW 산하 독일개발투자공사(DEG)는 대출(33.5억불) 및 지분투자(19억불) 등을 통한 개도국 개발금융 재원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KfW는 소액금융(microfinance) 분야의 최대 공여 기관 중 하나이며 지분투자를 통하여 지원대상 지역국가 및 분야 등을 한정된 임팩트투자 펀드⁷⁾를 조성하고 현지 금융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대표적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기관인

6) 본절은 한국금융연구원(2015)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 2005년 이후 KfW는 총 37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한 바 있으며, 펀드명 및 조성목적, 지원분야 등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International-financing/KfW-Development-Bank/Topics/Financial-System-Development/>

GIZ 또한 주민대상 금융교육 실시, 정부 및 금융기관 역량강화 지원 등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표 3〉 독일의 금융분야 개발협력의 5대 과제 및 지원사례

1. 소액금융(Microfinance)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금융(Micro-savings account & credit) : 금융소외계층의 저축활동 및 생계유지·사업영위 등에 필요한 자금용자활동 • 소액보험(Micro-insurance) : 취약계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W) 獨 Procredit銀* 설립투자 및 현지법인 설립·운영 지원 * 獨 네덜란드 공공/민간부문 합작 중소기업·소액금융 특화은행으로 세계 21개 지점 보유. 여신 38억유로('16년말) 91% 동유럽 집중 - Procredit Bank 설립 시 지분투자(46백만 유로, 지분 14.5%) 실시 - 개도국 현지법인(21개소) 설립 시 지분투자 및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설정을 통한 운영자금 용자
2. 중소기업 및 농업금융(SMEs and Agricultural Financing)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소영농 가계·기업들의 운영/시설자금 등 투융자 지원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W) 우간다 소액금융은행 리파이낸싱 지원('12년, 4.5백만 유로) • (DEG) 케냐 Kevian Kenya Ltd 여신제공('12년, 7.5백만불) - 케냐 중견 식품가공업체(과일주스 제조)인 Kevian Kenya Ltd*의 가공 공장 확장 필요자금 대출로 현지 40천명 상당 농부 혜택 * 당사의 공장 자동화설비 구축 및 현지직원 교육은 獨 크로네(Krones)社가 담당하며, 당사의 제조상품은 獨 빌트(Rudolf Wild GmbH & Co. KG)社에 납품 • (GIZ) 우간다 금융시스템 발전 지원 프로그램('14년, 17.4백만 유로) - 농업·소외지역 금융 사업준비, 금융소비자 대상 교육
3. 금융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강화 지원 및 은행·보험시장 감독 자문 서비스 제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W) 우크라이나 은행시스템 안정화자금 대출 ('14년, 2억 유로) - 우크라이나 금융기관 부실화로 예금보험기금이 일시 고갈함에 따라 재원보충자금을 준상업차관 조건으로 대출

4. 책임금융(Responsible Financing)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액금융 등 상품의 최고법정금리 설정 및 소비자 차별금지 등 실시 지원 • 금융교육 : 금융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실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W) 금융분야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14-'15) - '세계 저축의 날' 국내도입('15년), 공립학교 내 금융교육 실시, 라디오를 통한 금융교육 실시 등 기초금융교육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
5. 녹색금융(Green Finance)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적응 사업 수행에 대한 자금 지원

자료 : <http://www.bmz.de/en>

독일 이외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타 공여국들은 금융분야 개발협력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AFD 및 Proparco(프랑스), CDC(영국) 등 양자 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DFI)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로 현지 공공-민간부문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거나, 펀드나 금융기관 등 자금중개 메커니즘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4〉 유럽 양자개발은행 및 DFI 금융분야 개발협력 지원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W) 인도 SBI(국영상업銀) 모기지론 자금 전대금융('17년, 2.7억불) • (AFD) 인도 국영주택銀 친환경주택사업 전대금융('17년, 1억 유로) - 친환경주택 인증사업 활성화, 정책수립 예산지원, 주택건설자금 지원 등 • (Proparco) 가나 Fidelity銀 모기지론 자금 전대금융('13년, 13백만불) • (CDC) 우간다 DFCU* 설립('64년) 지분투자 및 지속적 투융자 활동 실시 (現 CDC 지분 10%) * 現 우간다 제2 상업은행, 설립초기 장기개발금융 공급역할 수행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2) 일본

위와 같이 유럽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개발협력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금융분야 개발협력 지원활동은 그 규모 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수원국의 정책, 조직 등 정치적 개혁을 수반하는 금융분야 발전 지원활동을 수원국의 주권활동으로 인식하여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및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의 방식으로 금융분야 지원활동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등을 계기로 일본은 수원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국가채무 조정 등 금융개혁 지원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지원활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JICA는 금융개발과제 체계도를 수립하여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의 목표에 맞는 지원활동을 규명하고 있다. 금융개발과제 체계도는 ‘금융 시스템의 육성 및 안정·효율화’와 ‘적절한 거시금융정책의 실시’라는 2가지 전략목표 하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목표 및 하위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JICA는 각 수원국의 금융분야 지원방향 설정 시 <그림 3>과 같이 수원국의 발전정도(최빈국, 저개발국, 중진국 등 3개 분류)에 따라 금융개발과제별 중요도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주요 협력채널 역시 정부, 중앙은행,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표 5〉 JICA 금융개발과제 체계도

목표 (개발전략목표 → 중간목표 → 하위목표 순)		지원사업 사례
1.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 금융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성 해소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대 및 사회시스템 효율화 달성에 기여		
1.1. 종합적 금융제도의 설계		△ 금융자유화·시장개방관리 지원
1.1.1. 통합적 금융제도의 설계		△ 외환관리·자본이동규제 지원
1.1.2. 금융기관 정비·인정·강화		△ 국가채무관리 지원
1.2. 금융기관 정비·인정·강화		
A. 맹아적 금융체제 정비		X (소액금융기관 체제 구축)
B. 주요 금융기관 정비		O (재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 독립)
C.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X (국영상업은행의 설립, 개혁 및 민영화)
D.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 (금융기관 정보 공시제도 수립 지원)
E.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O (금융기관 검사 관련 인제 양성)
F.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O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원)
G.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O (자금결제시스템 정비 관련 지원)
H.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O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및 강화 지원)
I. 금융시스템의 정비·인정·강화		X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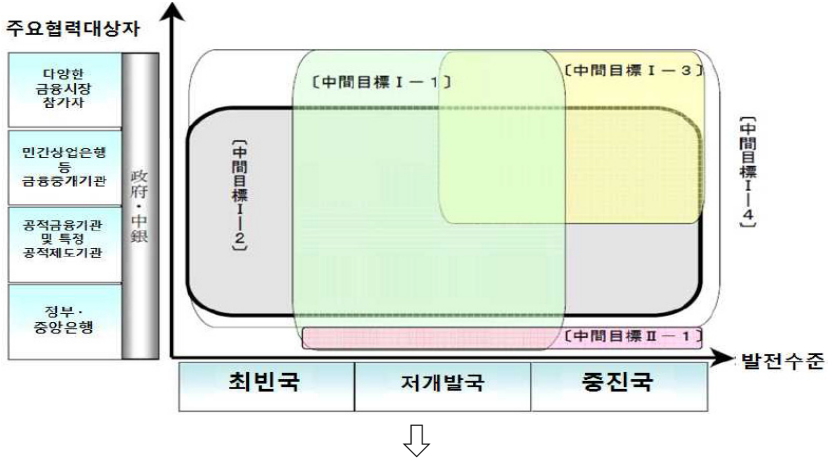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금융기관 관련 지원 ○ 무역금융제도 정비 관련 지원 ○ 중소기업금융기관 관련 지원 ○ 주택금융기관 관련 지원 ○ (소액금융기관의 경영 개선) ○ 금융기관 직원의 심사, 신용분석능력, 금융기관 경영관리능력(ALM 등)의 강화 지원 X (생명손해보험사 재무규제정책 입안 지원) X (증권업 자격제도 구축 지원)
		<p>특정부문 진출 목적 공적금융기관의 설치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주택금융 등 담당기관)</p> <p>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전사적 목표관리(ALM 등)</p> <p>연태별 규제 및 제도정비능력의 향상</p> <p>연태능력향상</p> <p>목표 (개발전략목표 → 중간목표 → 하위목표 순)</p>	<p>지원사업 사례</p>
<p>1. 금융시스템의 정비·안정·강화 (계속)</p> <p>- 금융시스템의 구축 및 취약성 해소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대 및 사회시스템 효율화 달성에 기여</p>			
		<p>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의 정비 (콜, 어음시장 등 은행간 시장, 채권RP 등 공개시장)</p> <p>주식·채권시장 정비</p> <p>크레딧시장 정비(대출채권거래시장, 증권화시장 등)</p> <p>외환시장 정비</p> <p>상품시장(commodity market) 정비</p> <p>파생상품시장 정비</p> <p>각종 펀드에 대한 직접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X 단기금융시장 설계 지원 ○ 자본시장 정책설계 및 제도정비 지원 ○ 자본시장 감시·감독체제 정비 지원 ○ 거래소 및 파생상품시장 개설 지원 X (신디케이트 론 시장 육성 지원) X (외환시장 감독인원 육성 지원) X (상품선물시장 구축 지원) X (파생상품시장 구축 지원) X (펀드감시제도 구축 지원)
<p>1.3. 금융시장 육성</p>			

1.4. 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은행법, 중앙은행법, 증권거래법, 상법, 기업법, 세법, 파산관련 법제도 등) 기업회계제도 및 감사제도(포함 금융기관 감사장부 등 공공회계·원조회계)의 정비 금융관련 정보기능 정비 (금융통계, 금융정보시스템, 신용(등급)정보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독규제 정비	△ 관련법 정비 및 집행 관련 지원 ○ 기업회계제도 정비 관련 지원 ○ 금융통계 정비 관련 지원 X (공적연금 운영관리 규제 지원)
2. 적절한 거시금융정책의 실시	: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통한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효율 향상 달성, 이를 위한 적절한 금융정책 실시	
2.1. 중앙은행의 정책역량 향상	금융정책의 입안 및 운영 관련 역량강화 금융관련 정보역량 강화 (금융통계, 금융정보시스템, 신용(등급)정보 등)	○ 경제정보, 금융시장제도 등 조사분석 지원 ○ 금융경제 관련 통계정비 지원 ○ 금융통계 정비 관련 지원

주) ○ : 지원경험이 있는 사업, △ : 전체사업 중 금융분야 지원활동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사업, X : 지원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
 () : JICA의 지원경험이 없는 사업사례임.

자료 : JICA, 과제별 지침(금융), 2010; 한국금융연구원(2015) 제인용

〈그림 3〉 JICA의 국가발전단계별 금융분야 지원방향



최빈국	
개발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 금융제도 구축 미비 등 금융부문 발전정도가 매우 낮은 상태 • 통화·은행제도 신뢰가 낮아 자본축적정도가 낮고, 민간은행 중심의 제도권 금융이 기능하지 않아 사금융 의존도가 높음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목표 1.2 달성에 집중 - 제도권 금융체계 중 민간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계 형성 - 사금융 의존도 축소를 위하여 소액금융체계 육성 및 정착
저개발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중심의 금융경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은행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목표 1.1~3, 2.1 달성에 집중 -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의 효율적 금융중개 및 결제, 신용창조 기능 수행을 위하여 규제/감독체계 강화 등 필요 - 중앙은행 강화, 국영은행 민영화, 정책금융 개편 등
중진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간접금융체계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고도화된 간접금융기법의 구축 및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필요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목표 1.2~3, 2.1 달성에 집중 - 시장 다변화 및 감독/관리체계 구축 - 금융의 국제경쟁력 및 매력도 구축 필요

자료 : JICA, 과제별 지침(금융), 2010; 한국금융연구원(2015) 재인용

위 과정을 통하여 JICA는 각 수원국의 개발맥락에 부합하는 중점지원 분야를 식별한 후 이에 기초한 지원사업들을 기획 및 실시하고 있다. JICA는 공공·금융기관 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기술협력 사업들을 실시하는 한편, 수원국의 금융부문 개혁방안에 따라 소요되는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개혁조치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이행률에 따라 포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원국 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6〉 JICA의 금융분야 주요 지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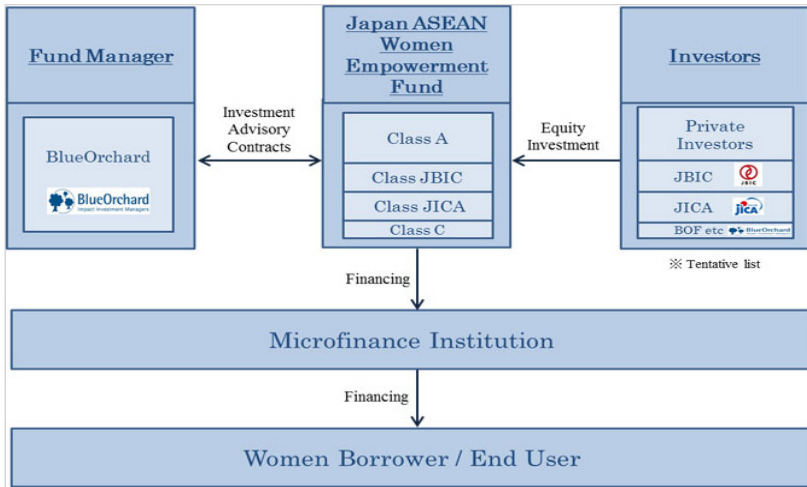
<p>① 프로그램차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경제사회개혁정책 예산지원(2,000억엔,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시장 개혁(관리변동환율제 도입 등), 금융부문 개혁(기준금리 유연성 제고 등)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예산지원 • 이라크 재정개혁정책 예산지원 (550억엔, '16-'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250억엔(WB 협조용자), ('17년) 300억엔(단독지원) - 공기업 개혁(공공부문 보수연금제도 효율화, 공기업(170개) 행정투명성 제고)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예산지원 <p>② (전대차관) 파키스탄 제1소액금융은행 앞 전대차관('12년, 2.2백만불)</p>

출처 :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

한편, JICA는 아시아 역내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금의 직접 지원을 넘어 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초기 성과로서 JICA는 민간부문투자금융(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를 활용하여 스미모토 보험사 등 日 민간부문, JBIC 등과 합작으로 동남아 미소금융 재단의 여성 소액대출재원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1.2억불 규모의

日 - ASEAN 여성역량강화펀드(Japan-ASEAN Women Empowerment Fund)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⁸⁾. 또한 동 펀드의 운용사무는 스위스 기반의 글로벌 임팩트 투자관리기관인 BlueOrchard에 위임하여 펀드 활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4〉 日 - ASEAN 여성역량강화펀드 구조



자료 :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

위와 같은 양자 공여기관들의 활동은 자국과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해당 수원국의 금융부문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원국 거시경제 내 자금중개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여국이 이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민간부문의 생산 및 소비

8) JICA와 JBIC은 동 펀드에 60백만불(각 30백만불)을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및 비용부담이 큰 클래스를 설정하여 민간부문의 추가 재원공급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활동이 국경이라는 지리적·정치적 경계를 넘어 광범위한 경제영토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과의 경제 상호연관성이 큰 수원국 민간부문의 투자 및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일종의 공공재 투자행위라 인지하고, ODA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세계은행(World Bank)

주지하듯이 양자 공여기관들이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수원국의 금융안정 및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한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확대를 간접적으로 취하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면,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등 다자 공여기관들은 역내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역내 경제통합 등 추진을 위하여 금융분야 지원활동에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복구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행(World Bank)은 회원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은 물론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각국의 금융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분야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금융분야 지원활동은 크게 ①각 회원국의 금융관련 통계정보 취합, ②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공동으로 각 회원국의 금융발전정도를 평가

모니터링하는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③World Bank와 IFC 주도로 이루어지는 금융부문 기술 지원(T/A) 활동, ④금융시스템개발(Financial System Development) 및 금융분야 지원을 위한 유무상 자금협력 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세계은행은 1960년부터 수집된 217개 회원국의 거시경제 및 개발 관련 주요 통계지표를 주제별, 국가별, 지표별로 정리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은행은 1999년부터 IMF와 공동으로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을 평가하여 취약점을 조기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해 금융위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을 실시하고 있다. FSAP는 금융안정평가(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와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한 금융발전평가(financial development assessment)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대해서는 IMF가 평가를 담당하며,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에 대한 평가는 양 기관이 평가를 공동 담당하고 있다. FSAP는 회원국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거시건전성, 유동성 관리체계, 위기관리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World Bank의 개발사업 수행 및 금융분야 기술지원(T/A)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World Bank(IBRD 및 IDA)와 IFC가 주축이 되어 금융부문 기술지원(T/A) 활동,

금융시스템 발전(Financial System Development) 및 금융분야 지원을 위한 자금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원(T/A) 활동의 경우 주로 ①금융시장 기반정비(예 : 재산권 확립, 지배구조 개선, 통계정비 등), ②시장개방, ③시장기능을 활용한 연기금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확립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금지원활동의 경우 금융분야 개혁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정부재정을 기술협력(T/A) 혹은 프로그램 차관을 통한 예산지원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 공공민간분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자금지원방식을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들의 금융분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7〉 World Bank의 금융분야 주요 지원사례

- 우크라이나 금융분야 강화 지원사업(5억불, '15년)
 -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금 자원보충, 국영상업은행들의 자본재편(recapitalization) 및 부실기관 정리계획 수립, 은행부문 개혁을 위한 법령 및 기관체계 재편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미얀마 경제사회개혁정책 개발사업(1억불, '16년)
 - 공공은행 개혁,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제·감독체계 선진화 소요자금 지원
- 키르기스스탄 금융분야 개발사업 (13백만불, '12년)
 -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관련 법·제도 개선, 우체국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 국영상업은행의 민영화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자료 :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

4)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개발과 역내 자유무역 및 지역통합 달성을 지원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역시 역내 개발도상회원국들의 금융분야 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DB는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장기 전략체계를 담은 “전략 2020(Strategy 2020)”에서 인프라, 환경, 지역협력 및 통합, 교육, 그리고 금융부문 개발(Financial Sector Development)을 향후 ADB의 5대 중점지원분야로 제시하였다. ADB는 개발도상회원국들의 금융부문 발전(=금융심화)이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성장을 이끄는 핵심임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금융포용)이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를 이룩하는 필수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ADB는 전략 2020 이행을 위한 금융 분야 운영계획(ADB Financial Sector Operational Plan, FSOP)을 수립하였는데, 동 계획은 현재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회원국들이 직면한 금융부문 개발과제를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ADB의 금융부문 내 주요사업분야, 지원모델 및 방식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ADB는 개발도상회원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 DMCs)을 소득수준, 인구의 수 및 밀도 등을 고려하여 5개 발전단계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의 개발맥락을 고려하여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있다.

〈표 8〉 ADB의 국가발전단계별 금융분야 지원 가이드라인

대규모 개발도상회원국(Large DMCs) 예)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지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부문은 물론 소액금융(micro-credit) ~ 자본시장에 달하는 총체적 금융부문의 발전(full-fledged financial sector) 필요 지방도시의 원활한 인프라 구축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정부 금융(subnational finance) 및 지방채 시장(subnational deb market) 발전이 중요
중소득·중규모 개발도상회원국(Medium DMCs)	
지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부문 개발정도가 상당하나 은행부문의 의존도가 높아 비은행 금융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 다각화 노력이 필요
저소득·소규모 개발도상회원국(Small DMCs) 예) 라오스,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등	
지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의 금융경제 실현 부족으로 금융경제규모의 확대 필요 비은행 부문과 자본시장의 확대 필요
인구과소 개발도상회원국(DMCs with Low Population Densities) 예) 몽골, 카자흐스탄, 솔로몬군도 등	
지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지점 설치가 어려워 금융접근성이 낮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금융 등 방안 활용 필요
특수 개발맥락 하 개발도상회원국 (DMCs with Special Development Needs)	
지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부국(카자흐스탄, 동티모르 등) 및 고외환보유고국(중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고 및 국부펀드 등 형태로 축적된 국가자산의 관리 필요 농업중심국가(캄보디아, 인니, 베트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활성화를 위한 금융체계 구축 필요 취약국(아프간 등) : 금융시스템의 신뢰축적을 위한 금융부문 개발 지원

자료 : ADB(2011), Financial Sector Operational Plan

연이어 2016년 출간된 FSOP 중기검토보고서를 통하여 ADB는 금융 분야 핵심 지원분야를 ① 금융부문 개발, ② 포용적 금융, 그리고 ③인프라 금융으로 간추리고 동 분야 지원에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혔다. 2016년 20억불에 달하는 ADB의 자금이 금융분야 개발 및 지원에 공급되었으며, 이 중 70% 가량(14억불)이 공공부문 지원을 위하여 활용된 바 있다. ADB 역시 정부부문의 금융분야 개혁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기술협력(T/A) 혹은 프로그램 차관을 통한 예산지원방식으로 지원하거나 공공·민간분야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 등 광범위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개발도상회원국들의 금융분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DB는 다양한 양다자 공여 기관들과 금융분야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신탁기금 공동 조성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⁹⁾.

〈표 9〉 ADB의 금융분야 주요 지원사례

- 방글라데시 BRAC 은행 지속가능영업 지원사업(30백만불, '15년)
 - 환경·인권개선 부문에 모범을 보이는 현지 의료봉제업체 지원에 한정된 선순위대출자금을 제공
- 필리핀 금융시장 규제 및 중개시스템 강화사업(2억불, '13년)
 - 금융분야 안정성 및 비은행 금융기관 거버넌스 강화, 자본시장 발전 등 개혁의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
- 라오스 농업금융 지속가능성 확대사업(10백만불, '13년)
 - 농업·미소금융 규제환경 및 농촌진흥은행 영업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자료 : ADB 홈페이지 (<http://www.adb.org>)

IV. 우리 금융분야 지원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보건, 교육, ICT 등 수원국의 실물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적극적이거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대표적 무형 인프라인 금융부문 개발협력 활동에는 다소 소극적이며, 지원형태 역시 정책 자문과 초청워크숍 등이 대부분으로 개도국의 금융시스템의 발전 지원과 공공·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활동은 이제 걸음마

9) '17.12월 현재 JICA,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과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협력국과 교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 “거시·금융” 주제(총 68건) 하 “일반 금융시장”(20건), “금융기관”(17건), “거시정책 및 전망(14건)” 등 금융분야 정책자문사업을 다수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금융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거나 공공·민간 부문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연계 사례는 미비한 상황이다.

〈표 10〉 KSP의 금융분야 주요 지원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자니아 예금보험기구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자문사업('12-'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연구진) 예금보험공사 국제업무팀 - (주요자문내용) 독립 예금보험공사 설립 등 • 카자흐스탄 신용보증제도 도입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자문사업('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연구진) 신용보증기금-한국개발전략연구소 공동수행 - (주요자문내용) 신용보증기관 설립,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 신보, 카자흐스탄 기업육성기금(DAMU)과 MOU 체결('11.10월)

자료 : KSP 각 사업 최종보고서

대표적 무상협력기관 중 하나인 KOICA 역시 전문가 파견과 초청 워크숍 등 사업을 위주로 협력국 금융분야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약 16개 지원사업에 소규모 소액금융 사업을 골자로 한 금융포용 지원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융 감독관리체계 등 금융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활동은 초기 상태로, 중시개설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KRX)과의 협업사업 및 美 임팩트투자기금 앞 무상자금 공여를 통한 우간다 민간부문 자금지원사업 등이 시범적으로 수행되었다.

〈표 11〉 금융포용 지원활동을 포함한 KOICA 사업 목록

사업 유형	사업명	분야	금융포용 요소	사업 기간	사업비
국별 사업	필리핀 퀴리노주 농업종합개발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2013-2016	500만불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2014-2018	1,250만불
	미얀마 흘레구지역 농촌개발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2008-2010	200만불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지원사업	공공행정	증권시장 법령, 제도, IT분야 컨설팅 및 IT 인프라 개선	2014-2017	250만불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사업	공공행정	은행 간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015-2018	800만불
시민 사회협력 사업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 개발 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가축은행)	2009	1만불
	라오스 병아리 은행과 양계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병아리은행)	2011	1만불
	부르키나파소의 극빈 농촌 여성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퇴치 사업	교육	소액금융	2011-2015	7.2만불
	르완다 나루바카 빈민지역 자립지원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가축은행, 소액대출, 문해교육)	2012-2013	2.7만불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쪽응이우 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토대 구축 지원사업	공공행정	소액금융	2013	5만불
	베트남 빈롱시 지역 빈공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 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2013	6.5만불
	미얀마 이주민 빈민지역 소득 증대 및 기초교육 지원 사업	교육	소액금융 (싸이카대출)	2013-2015	2.2만불
	르완다 주민조직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농림수산	소액금융 (염소/암소은행)	2015-2017	4.2만불
	탄자니아 여성 역량개발 및 빈곤퇴치를 위한 소액대출사업	농림수산 (젠더)	소액금융	2015	7만불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에티오피아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사업 :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	교육	금융교육	2014-2019	2,000만불
	미얀마 주택검설개발은행 (CHDB) 디지털뱅크 구축 및 주택예금 보급확대를 통한 미얀마 금융접근성 제고 사업	공공행정	은행 간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금융교육	2018-2019	170만불

자료 : 주성수(2016) 참고 재구성, KOICA(2017)에서 재인용

〈표 12〉 금융분야 개발을 위한 KOICA 사업 목록

• (KOICA-KRX 협업사업) 호치민증권거래소(HOSE) 개설사업

구분	사업목적	소요예산	주요 사업내용
1차 (’96-’98)	증권시장 설립기반 조성	80만불 (KOICA 부담)	전문가 파견 (자문, 연구, 교육 등)
2차 (’99-’00)	호치민市 주식거래 센터 설립(’00. 7월)	40만불 (공동분담)	현지자문, OJT, 거래소 설립지원
3차 (’01-’02)	既설립시장 발전 촉진	40만불 (공동분담)	현지자문, OJT, 하노이거래소 설립지원

※ KRX, ’00년 HOSE 개설후 지속 자문 중

• (임팩트투자)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15 - ’18년)
- KOICA 및 망고펀드* 공동조성펀드(50만불**)로 현지기업 자금지원
(’16.12월 기준 대출실적 : 23개 기업 앞 36만불)
* 美 임팩트투자기금(’11년 설립)으로 동아프리카 민간기업 대상 자산취득
자금 및 운전자본 지원(건별한도 5~50천불, 만기 6~36개월)
** 분담금 납부방식으로 35만불 기여 (투자의사결정 위임)

자료 : KRX 해외사업 설명자료 및 망고펀드 홈페이지

한편, 우리 특수금융기관¹⁰⁾들과 금융보조기관¹¹⁾ 등 공적금융기관들 역시 KSP 등 ODA 지원과 자체자금 등을 활용하여 초청연수, 컨설팅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 기관들은 기술협력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관의 전문성과 융합하여 시스템 구축사업 등 수주사업을 수행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10) 본고에서는 수출입-해외투자-대외경제협력-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입 은행, 국내개발금융 등을 제공하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은행, 농업금융 등을 제공하는 농협, 해양수산금융 등을 제공하는 수협, 주택금융 등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등

11) 금융감독원, 신용정보기관(NICE, KCB),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증권 선물거래기관(KRX, 예탁결제원) 등

〈표 13〉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의 금융분야 주요 지원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KSP 초청연수* 및 자체연수 진행 중이며, WB와의 MOU 체결('15.2월) 후 개도국 금융분야 컨설팅 및 연수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경험 연수('10년, 인니 감독청), 신용정보감독 연수('15년, 인니 중앙은행) 등 • (KAMCO) KSP 연계를 통한 초청연수* 등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現) 베트남 부실채권정리기구 대상 부실채권정리 초청연수 진행 • (예탁결제원) '06-'16년 간 태국, 인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사업(4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예결원(TSD) 증권대차/Repo시스템 구축('06.3월), 인니청산기관(KPEI) 증권대차/Repo시스템 컨설팅('15.7월), 인니예결원(KSEI) 차세대시스템 컨설팅('15.10월), 인니예결원(KSEI) 시스템 구축('16.8월) • (예금보험공사) “전자정부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컨설팅 중 ('16년 몽골, '17년 라오스)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표 14〉 KRX 해외사업 현황('17년 말 기준)

□ 증시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치민증권거래소(HOSE) 개설('00년) : 시장모델 개발 및 운영노하우 전수 등 • 라오스 증권거래소(LSX) 합작설립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100만불 및 IT시스템 880만불 지원(KRX 49%, 라오스 중앙銀 51%) • 캄보디아 증권 거래소(CSX) 합작설립('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200만불 및 IT시스템 700만불 지원(KRX 45%, 캄보디아 재정부 55%) 	
□ IT시스템 구축사업	
대상기관	주요내용
말레이시아거래소(B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매매 및 감리시스템('ETP') 구축('08.3월) • 채권 ETP 2차 개발 프로젝트('09.1월) • 마켓메이커감시시스템 구축('09.4월) • 이슬람상품매매시스템 구축('09.8월) • 파생상품청산결제시스템 구축('12.2월)
필리핀거래소(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시스템 구축('12.5월) • 공시시스템 구축('13.12월) • 필리핀증권거래위(SEC) 감시시스템 구축('14.2월)
태국증권거래소(SET)	• 통합(주식, 파생)청산결제시스템 개발 중
호치민거래소(HOSE) 하노이거래소(HNX) 베트남예탁원(VSD)	• 베트남 증시 종합 IT시스템 재구축사업 수주
우즈베크국가자산위(SCC)	• 증권시장 및 IT시스템 현대화사업 수주
아제르바이잔증권위원회	• 아제르바이잔 증시현대화 사업 수주

자료 : KRX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활용한 유상자금협력을 전담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역시 금융분야 지원의 초기 단계에 있다. 수원국 금융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방식의 자금지원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수원국의 공공·민간 금융부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최근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2.5백만불, '16년 승인)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은 캄보디아 현지 여성을 주 영업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기관들의 대출금을 현지 금융기관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EDCF가 교통·에너지·ICT 등 유형의 대형인프라 구축 지원을 넘어 무형인프라인 금융분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양다자 공여기관들이 다양한 유상자금협력 방식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금융분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EDCF의 양허성차관 활용에 있어 타 국외 주요기관들의 지원모델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금융분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금융부문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원국이 처한 개발백락과 금융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수원국별 맞춤형 금융분야 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양다자 개발은행과 DFI 등 금융협력기관들이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양자 공여기관들은 자국과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개발 지원 및 금융분야 자금지원활동을 실시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자국과의 연관성이 큰 수원국의 민간 부문에 투자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익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다자개발금융기관 등의 다자 공여기관들은 역내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역내 경제통합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개혁 등을 위한 자금 및 기술협력 활동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 기관들이 활용하는 자금지원방식의 경우 크게 <표 15>의 6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ADB는 FSOP를 통하여 수원국 금융분야 지원에 있어 보증의 활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다양한 개발금융 기법을 활용한 수원국의 금융분야 개발 지원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5> 주요 금융협력기관들의 금융분야 자금지원방식

지원방식	설명
① 프로젝트차관 (project loan)	• 결제시스템, 신용정보시스템 등 금융 관련 유형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② 프로그램차관 (program loan / policy loan)	• 금융관련 법령·제도의 구축 및 개혁과 이에 수반되는 특별기금 조성 등 공공정책(public policy)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③ 전대차관 (inter-bank loan / two-step loan)	• 현지 공공민간 금융기관 등의 특수금융 (농업금융, 소액금융, 중소기업금융 등)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
④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 특수기관 및 펀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미소금융은행 등 공공성을 보유한 공공민간소유 은행 및 펀드)
⑤ 기술지원(T/A) 및 지식협력	• 금융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협력 활동 및 지식공유 활동을 무상 지원
⑥ MDB 신탁기금 조성	• 금융분야 기술협력 및 유무상 자금협력 관련 기금 조성 및 협업사업 수행으로 우리 금융분야 비교우위와 MDB 보유 네트워크 등의 시너지 창출

자료 : 저자 작성

우리나라 역시 일부 무상협력기관들과 공적금융기관들이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한 경험이 있으나, 교통, 보건, 교육, ICT 등 실물인프라 구축 지원활동 대비 사업 수와 규모가 현저히 낮으며 지원 형태 역시 정책자문과 초청 워크샵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우리 공적금융기관들은 무상협력활동과 함께 해외수주사업 및 해외투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어 우리 금융시스템 운영유자감독 경험이 비교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들 기관들의 협력활동이 자금공여 활동과 결합될 경우 금융분야 지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 기관들은 금융분야 지원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지원하는 EDCF 역시 자금지원에 있어 과거 대형 실물인프라 구축 지원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협력국의 미소금융기관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대차관을 제공하는 등 금융분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개발은행과 DFI 등 금융협력기관들이 다양한 개발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분야 지원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EDCF가 이 기관들의 금융분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자금지원방식 등을 참고하여 금융분야 양허성 차관 지원의 외연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금협력활동 수행 시 비교우위를 보유한 우리 공적금융기관들과의 무상협력활동과의 체계적 연계가 뒷받침될 경우,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공여기관들은 자국과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실시하여 협력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작간접적 국익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EDCF를 포함한 우리 기관들의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우리 금융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협력국 금융분야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이들이 MDB 등 타 공여기관들의 발주사업과 순수민간사업 등 대규모 금융분야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분야 협력활동을 통한 협력국 내 금융인프라의 공고화는 협력국의 기업환경 개선과 실물경제 활동 촉진 등으로 이어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 혜택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협력국 금융분야 지원에 대한 우리 개발협력 정책·실행의 체계화 및 내실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분야와 개발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분야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성일, 이주영 (2013).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 유재원 등 (2012).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정책연구 : 12-03
- 오수현 등 (2017).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 연구. KOICA 연구자료 ODA 연구 2017-28-144
- 한국금융연구원 (2015). 국내 금융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 공공금융기관부문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은행 (2011). 한국의 금융제도

해외문헌

- ADB (2008), Strategy 2020: The Long-Term Strategic Framework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08-2020
- ADB (2011), Financial Sector Operational Plan
- ADB (2017), Review of 2011 Financial Sector Operational Plan
- KfW (2016), Current topics :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웹사이트

- <http://www.adb.org> (접속일 : 2017년 10월 30일)
- <http://stats.oecd.org> (접속일 : 2017년 11월 25일)
- <http://www.bmz.de/en> (접속일 : 2017년 11월 28일)
- <http://www.jica.go.jp> (접속일 : 2017년 11월 30일)
- <http://www.worldbank.org> (접속일 : 2017년 10월 18일)

EDCF

III. 한국의 개발협력

EDCF의 베트남 개발 기여도에 관한 실증 분석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치록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안지연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Shaping the Future with EDCF and KSP)의 개최 결과 및 의의

안주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EDCF의 베트남 개발 기여도에 관한 실증 분석¹⁾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치록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안지연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1.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1. EDCF의 베트남 지원 현황과 분석범위

- (승인액 기준) EDCF의 대베트남 총승인액(1987-2016년)은 2.9조원이며 승인 건수는 64건임.
- 수원국별 기준으로 베트남은 EDCF의 최대 수원국이며, 2위인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임.
- EDCF의 대베트남 지원 비중은 승인금액 기준으로는 19.2%(15.2조원 중 2.9조원), 건수 기준으로는 17.2%(373건 중 64건)를 차지함.

1) 본고는 2017년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용역 “실증분석을 활용한 EDCF의 베트남 개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EDCF의 국가별 승인현황 (2016년말 기준)

순위	국명	승인액계 (백만원)	개도국차관			
			건수	백만원	백만불	비중
1	베트남	2,913,414	64	2,913,414	2,498.02	19.2%
2	방글라데시	1,316,621	23	1,316,621	1,116.07	8.7%
3	필리핀	889,760	18	889,142	777.53	5.9%
4	캄보디아	882,677	21	882,677	754.10	5.8%
5	미얀마	681,542	12	681,542	584.70	4.5%
6	스리랑카	662,012	27	662,012	605.75	4.4%
7	인도네시아	650,124	19	649,146	599.91	4.3%
8	탄자니아	630,474	12	630,474	545.10	4.1%
9	우즈베키스탄	606,569	11	606,569	509.20	4.0%
10	라오스	563,049	14	563,049	463.17	3.7%
합 계		15,195,677	373	15,194,081	13,176.66	100.0%

주) 승인액 합계에는 2건의 소액 해외투용자가 포함되어 있어 개도국차관 합계와 상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7), 『EDCF 통계』.

□ (집행액 기준) EDCF는 2016년말까지 베트남의 49개 사업에 대해 총 1.37조원을 집행하였음.

○ 이는 EDCF 총집행액 6.5조원의 20.9%로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이며, 2, 3위인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의 7.3%의 3배에 가까운 비중임.

〈표 2〉 EDCF의 국가별 집행 현황 (2016년말 기준)

순위	국가	집행액계	개도국차관		
			건수	금액	비중
1	베트남	1,370,378	49	1,370,378	20.9%
2	방글라데시	476,827	18	476,827	7.3%
3	스리랑카	476,325	25	476,325	7.3%
4	캄보디아	356,490	16	356,490	5.4%
5	인도네시아	339,321	18	338,343	5.2%
6	탄자니아	306,801	11	306,801	4.7%
7	모잠비크	228,137	11	228,137	3.5%
8	필리핀	218,826	15	218,208	3.3%
9	중국	217,987	22	217,987	3.3%
10	요르단	208,638	8	208,638	3.2%
합 계		6,546,875	314	6,545,2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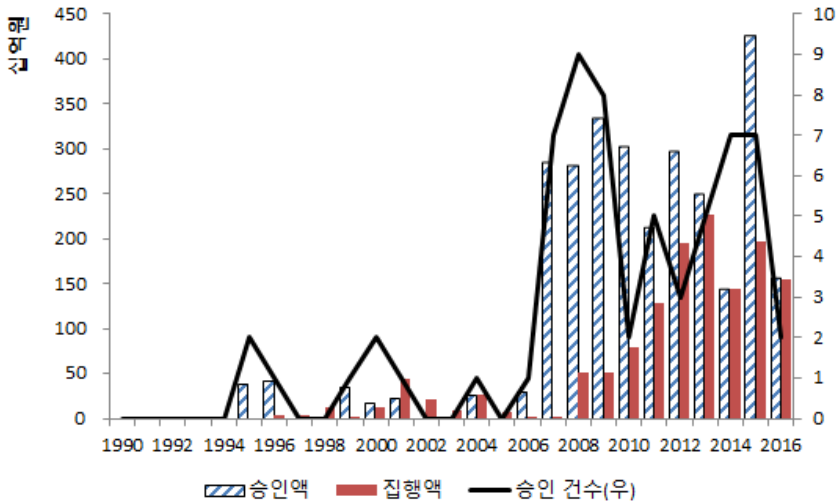
주) 승인액 합계에는 2건의 소액 해외투용자가 포함되어 있어 개도국차관 합계와 상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7), 『EDCF 통계』.

□ (연도별 추이) 대베트남 지원은 1995년 2건의 사업이 승인된 후 계속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 1995-2006년까지는 연도별 승인 건수가 0-2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 7건으로 급증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1〉 연도별 EDCF의 대 베트남 승인액 및 집행액 추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7), 『EDCF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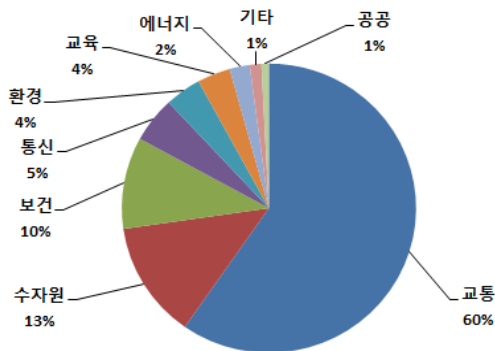
□ **(증여등가액)** EDCF지원액은 양허성이 높아 실질적 증여의 효과가 있는데, 총 승인사업 기준 증여등가액(2016년 불변가치 기준)은 2.62조원(혹은 22.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대베트남 지원사업의 증여율(grant element)은 평균 79.77%였으며, 구속성원조의 양허성을 나타내는 양허성수준(concessionality level)은 평균 68.49%였음.

○ 증여율(G.E) 대신 양허율(C.L)을 적용하면 대베트남 이전액은 2.23조원(혹은 19.2억 달러) 규모임.

- **(분야별 구성)** 교통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승인액은 1.7조원(60%), 승인 건수는 16건(25%)임.
- 그 외 승인액 기준으로 수자원 13%, 보건 10%, 통신 5%, 환경 4%, 교육 4%, 에너지 2% 등으로 구성
- 분야별 평균 규모는 교통이 1,078억원으로 가장 크고, 통신 735억원, 수자원 313억원인 반면, 보건, 교육, 환경 등 여타 분야는 평균 200억원 내외
 - 특히 보건과 교육의 평균 규모는 각각 165억원, 176억원으로 작는데 이는 대부분 기자재차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지출액 기준(2017년 4월말 현재)으로 보면 교통 60.2%(8,367억원), 보건 11.5%(1,595억원), 수자원 9.0%(1,256억원), 환경 8.0%(1,105억원), 에너지 3.9%(436억원) 등을 차지

〈그림 2〉 EDCF의 대베트남 분야별 구성(승인액 및 2016년말 기준)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7), 『EDCF 통계』.

□ (EDCF의 대베트남 교통인프라 지원) 2017년 4월말 현재까지 교통 인프라 분야에 8,367억원이 지출됨.

○ 그 결과 13개 사업을 통해 총 33.26km 길이 교량이 신설되고, 총143.91km의 도로가 신설(개선 포함)되었거나 될 예정임.

- 이는 2015년 현재 베트남의 중앙정부 관리 하에 있는 국도 혹은 고속도로의 0.87%에 해당하는 규모임.

○ EDCF의 교통분야 지원액 중 현지에서 조달하는 현지화비율은 교통분야의 경우 평균 64% 수준이었음.

○ 이상과 같은 EDCF의 교통인프라 기여가 거시적 개발효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음.

□ 지난 30년간 EDCF의 지원이 베트남 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통인프라 부문에 국한하여 분석함.

○ 지원분야가 다양한 상황에서 각 분야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원 총액만을 고려하여 효과를 추정할 경우 엄밀성이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음.

- 총액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EDCF사업이 수원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비해, 교통인프라와 같은 한 부문에 국한해 분석할 경우 경제성장이나 개발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하고, 따라서 결과의 엄밀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음.
- EDCF의 대베트남 사업 중 교통인프라의 비중은 60%(승인액 및 집행액 기준 동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대표성이 있음.
 - 제한된 시간과 예산 하에서 여타 분야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각 분야마다 개발에 미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어려움.
 - 또한 다른 분야의 경우 동일 분야라고 해도 사업별로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고, 또 지원 규모도 크지 않아 유의미한 정량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2. 분석방법

- 개발 효과 분석을 위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 그리고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음.
- 거시적 분석이란 국민경제 전체 단위의 주요 변수(생산성, 생산, 고용, 빈곤율, FDI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미시적 분석은 대표적인 사업사례를 이용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회귀분석과 산업연관분석, 교통 인프라 효과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성분석 위해서는 설문 조사, 현장조사, 전문가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 패널회귀분석에서는 EDCF지원으로 인한 도로인프라의 확장이 베트남의 생산성과 생산 등에 영향을 추정하였음.
- 각각의 분석방법은 나름의 장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표 3〉 기여도 평가 분석방법론

접근법	세부 사항	영향 부문	분석 방법		필요 자료
거시적 접근법	생산 효과	생산, 고용, 수출 유발	정량 평가	패널 회귀분석 산업연관 분석	- 다수 개도국 각종 거시 패널 변수 (GDP, 생산성, 고용, 무역, 교통인프라 등 통계), 약 50개국 20년 이상 - EDCF 지원액, 베트남 인프라 통계, 교통량 통계 등
	생산성 효과	생산성 향상	정량 평가	패널 회귀분석	- 다수 개도국 각종 거시 패널 변수 (GDP, 생산성, 고용, 무역, 교통인프라 등 통계), 약 50개국 20년 이상 - EDCF 지원액, 베트남 인프라 통계, 교통량 통계 등
산업 연관 접근법		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출 유발	정량 평가	산업연관 분석	- 베트남 산업연관표, EDCF 지원액, 현지화 비중 - 베트남 거시경제지표(산업별 GDP, 고용지수, 무역액 등) - 베트남 지역간 산업연관표(가능할 경우)

접근법	세부 사항	영향 부문	분석 방법		필요 자료
사례 연구 접근법	직접 편익	운영비용 절감	정량 평가	추정계수 활용	- 프로젝트별 관련 통과 교통량, 교통속도, 운송비용 통계(사업 전후), 운영비용 관련 추정계수
		운영시간 단축		추정계수 활용	- 프로젝트별 관련 통과 교통량, 교통속도 (사업 전후), 운영시간 관련 추정계수
		배기가스 감축		추정계수 활용	- 프로젝트별 관련 통과 교통량, 교통속도 (사업 전후) - 차량별 비중, 차량별 배기가스량 관련 추정계수
	간접 편익	지역개발 기여	정성 평가	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 인터뷰 보고서, 설문결과, 지역현황 관련 각종 통계
		지식 및 기술 전수		인터뷰, 설문조사	- 인터뷰 보고서, 설문결과, 현지기업 내부자료

II. 거시적 분석을 통한 개발효과 분석

1. 패널회귀분석

1) 분석방법

- (분석 목적)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해 도로 건설이 생산, 생산성, FDI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경제수준과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EDCF에 의한 베트남 도로 건설의 간접적인 효과를 추정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생산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하여 추정함으로써 베트남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전 세계의 국가들 중 베트남과 보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 OECD 국가들에서 도로연장이 생산 및 생산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봄.
- 또한 경제수준과 빈곤율의 관계 및 도로연장과 FDI 유입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EDCF에 의한 베트남 도로 건설의 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함.
- (분석 방법) 패널 고정효과 분석 및 동태적 패널 모형의 분석을 이용하여 도로자본 스톡이 생산, 생산성, 빈곤율 및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1인당 GDP의 로그값을 자본 장비율의 로그값, 인적자본, 개방도, 도로연장 스톡의 로그값 등에 대하여 패널 고정효과 회귀를 하여 추정
 -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생산성을 제반 요소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도로연장 스톡에 대하여 동태적 고정효과 패널 회귀를 하여 추정

- 1인당 GDP와 빈곤율의 관계 및 도로연장과 FDI 유입의 관계 또한 추정
- 고정효과 분석을 하는 것은 국가 간 비교보다는 동일 국가 내에서 도로자본 스톡의 변화가 생산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구함으로써 정책의 인과적 효과에 보다 가까운 값을 얻기 위함임.
- **(패널 자료)**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OECD 국가들과 소국(인구 1백만명 미만)을 제외한 90개 국가들의 불균형 패널 자료
 - OECD 국가들은 베트남과 성격이 상이할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
 - 도로연장이 1개 연도에만 관측된 4국과, 표본기간 중 최대 인구 기준으로 1백만명 미만인 소국 또한 분석에서 제외함.
 - 표본기간을 1990년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연장 자료가 1990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임.

2) 분석결과

- 생산촉진 효과
 - 추정에 의하면, 여타 요소들을 통제할 때 도로연장의 10% 증가할 때 GDP는 약 2.4% 증가한 것으로 관측됨

$$\ln(1인당\ GDP) = 0.24^{***}\ln(\text{도로연장}) + 0.39^{***}\ln(\text{자본장비율}) + 0.14(\text{인적자본}) + \text{국가별 효과} + \text{연도별 효과}$$

〈표 4〉 패널 고정효과 추정 결과 (1인당 GDP)

증속변수: lny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ln(도로연장)	0.2404	0.0898	2.68	0.009
ln(자본장비율)	0.3869	0.1085	3.57	0.001
(인적자본)	0.1366	0.2888	0.47	0.637
연도더미	포함시킴			
표본크기	1,168	국가 수	90	
Within R제곱	0.519			

주) 표준오차는 이분산과 자기상관에 견고한 클러스터 표준오차
출처: 직접 계산

- 이 결과에 의하면, 연도별 더미로 세계적 경기변동을 고려하고, 물적 및 인적자본을 통제된 후에도 도로 길이의 1% 증가는 1인당 GDP의 0.24% 증가와 결부되어 있음.
 -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것이므로, 영속성을 지니는 요인들로 인한 가상의 상관관계는 제거한 것이며, 국가별로 상이한 비관측 요인들로 인한 상관관계도 통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베트남의 중앙정부 관리대상 도로연장의 0.87%가 EDCF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추정결과에 따르면 EDCF의 지원은 베트남 1인당 GDP를 약 0.21% (=0.87% x 0.24) 상승시킨 효과가 있음.

□ 빈곤율 감축 효과

- 1인당 GDP의 상승은 빈곤율을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만약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1인당 GDP가 상승하였다면 그 만큼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추가로 발생함.

$$\text{빈곤율} = -5.75 \cdot \ln(\text{1인당 GDP}) + \text{인구효과} + \text{국가별 효과} + \text{연도별 효과}$$

〈표 5〉 패널 고정효과 추정 결과 (빈곤율)

종속변수: 빈곤율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부양인구비율(노년)	1.7189	0.5456	3.15	0.002
부양인구비율(유년)	0.0939	0.1888	0.50	0.620
ln(1인당 GDP)	-5.7516	2.9223	-1.97	0.053
연도더미	포함시킴			
총표본크기	678	국가수	79	
Within R제곱	0.452			

주) 표준오차는 이분산과 자기상관에 견고한 클러스터 표준오차
출처: 직접 계산

-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부양인구 비율(노년과 유년을 각각 별도로)을 통제한 경우에도 한 나라에서 1인당 GDP의 10% 상승은 빈곤인구비율을 평균 약 5.8%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EDCF의 지원이 베트남 1인당 GDP를 0.21% 상승시켰다면 이는 빈곤율의 0.12%p (=0.575 x 0.21) 하락에 해당함.

□ 노동생산성 개선 효과

- 도로 건설은 사회간접자본을 증가시키므로 노동생산성(노동 한 단위 당 부가가치)을 증대시킴.
- 추정 결과에 따르면 도로연장이 1% 증가할 때 추가적인 자본 스톡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노동생산성(고용인 1인 당 부가가치)은 약 0.23% 증가함.

$$\ln(\text{노동생산성}) = 0.23^{**} \ln(\text{도로연장}) + 0.43^{***} \ln(\text{자본장비율}) + 0.1(\text{인적자본}) + \text{국가별 효과} + \text{연도별 효과}$$

〈표 6〉 패널 고정효과 추정 결과 (노동생산성)

종속변수: ln(노동생산성)	모형(1)	모형(2)
ln(ROAD)	0.190** (0.083)	0.229** (0.097)
(인적자본)	0.066 (0.301)	0.096 (0.283)
ln(자본장비율)		0.427*** (0.100)
연도더미	포함됨	
표본크기	1,168	1,168
Within R제곱	0.408	0.464

주) ***, **는 각각 1%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클러스터 표준오차 사용
출처: 직접 계산

○ EDCF의 지원으로 베트남의 도로연장이 0.87% 증가한 결과,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이 0.2% (=0.23 x 0.8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자본(노동자 1인당 자본)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모형 1)에는 노동생산성의 도로연장 탄력성이 약 0.19이며, 자본을 통제하는 경우(모형 2)에는 탄력성이 약 0.23으로, 탄력성은 자본 통제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음.
- 종속변수를 노동시간 당 부가가치로 바꿀 때에도, 자본스톡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결과가 거의 동일하고, 자본스톡을 통제된 모형에서는 효과가 오히려 더 증가함.

□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 도로연장의 증가가 장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태적 패널 모형²⁾을 차분GMM 방법³⁾으로써 추정함

- 종속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1인당 GDP의 로그 차분), 설명 변수는 직전 연도의 1인당 GDP 수준(로그값), 자본스톡 증가율, 직전 연도의 도로연장의 수준(로그값)으로 함

2) 동태적 패널모형이란 우변에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포함된 패널 모형

3) 차분GMM이란 Arellano and Bond (1991)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서, 종속변수의 증가분이 2기 전의 종속변수 값과 비상관이라는 적률조건(moment conditions)을 활용한다. 본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Delta \ln(Y)$ 이고 설명변수에 $\ln Y_{-1}$ 가 존재하므로 종속변수의 과거 값이 우변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추정을 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한치록(2017) 참조

- 연도별 더미변수로 세계적 경기변동을 통제하고, 고정효과 모형으로 국가별 특수성을 통제함.
- 내생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로 2기 전 이전의 1인당 GDP 로그값, 1기 이전부터의 자본스톡, 2기 이전부터의 도로연장의 로그값을 사용함

○ Arellano and Bond (1991)의 차분 GMM 추정 결과에 의하면, 도로연장이 10% 증가할 때 그 이듬해의 성장률은 유의하게 약 0.7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1인당GDP성장률_t = -0.37^{***}ln(1인당GDP_{t-1}) + 0.074^{***}ln(도로연장_{t-1}) + 0.50*\Delta ln(자본스톡_t) + \text{국가별 효과} + \text{연도별 효과}$$

〈표 7〉 패널 GMM 추정 결과 (1인당 GDP 성장률)

종속변수: 성장률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전년도 ln(소득)	-0.3679	0.0508	-7.24	0.000
전년도 ln(도로연장)	0.0739	0.0287	2.58	0.010
(자본스톡 증가율)	0.4967	0.2573	1.93	0.054
연도더미	포함시킴			
총표본 크기	1,164	국가수	90	

주) 클러스터 표준오차 사용
출처: 직접 계산

- 전년도 ln(도로연장)의 계수가 0.0739이므로, 전년도 도로연장이 10% 성장률 (로그차분값)은 약 0.0074포인트, 즉 약 0.74%p만큼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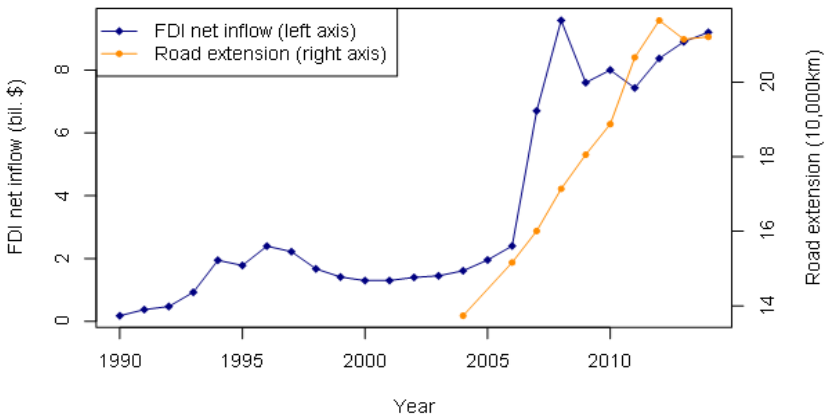
- Arellano-Bond 모형설정 검정이 통과됨(Arellano-Bond 검정 통계량 값은 Order 1에서 -5.2137 (p값 0.0000)로 기각하고 Order 2에서 -1.5541 (p값 0.1202)로 채택하여 모형설정에 문제가 없음.)
- 도로 건설에 1년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도구 변수를 더욱 과거의 것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증가하며 (약 0.096), 유의성과 모형설정 검정 결과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음.

○ 결국, EDCF지원에 의한 베트남 도로연장의 0.87% 증가는 그 이후 베트남의 1인당 GDP 성장률을 0.064%p (=0.074 x 0.87) 높인 것으로 추정됨.

□ FDI 유입 촉진효과

-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의 경우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1990~2014년의 기간 동안에 도로연장의 증가와 FDI 순유입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함.

(그림 3) 베트남의 연도별 도로연장과 FDI 순유입



○ 패널 고정효과 추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가 추정됨.

$$\begin{aligned}
 \text{FDI유입액}_t = & 19.8^{***}\ln(\text{도로연장}_{t-1}) + 17.2^{***}\ln(\text{자본스톡}_t) + \\
 & 20.8^{***}(\text{인적자본}_t) - 10.6^{**}\ln(\text{인구}_t) + 1.65\ln(\text{개방도}_t) - 0.036 \\
 & (\text{부양인구비율}_t) + \text{국가별 효과} + \text{연도별 효과}
 \end{aligned}$$

(표 8) 패널 고정효과 추정 결과 (FDI 유입액)

종속변수: FDI 유입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전년도 ln(도로연장)	19.764	2.312	8.55	0.000
ln(자본량)	17.193	2.609	6.59	0.000
(인적자본)	20.757	5.524	3.76	0.000
ln(인구)	-10.556	4.173	-2.53	0.012
ln(개방도)	1.649	0.886	1.86	0.063
(부양인구비율)	-0.036	0.088	-0.41	0.681
연도더미	포함시킴			
총표본 크기	1147	국가수	90	
Within R제곱	0.275			

출처: 직접 계산

- 자본스톡, 인적자본, 인구, 개방도, 의존인구비율을 통제할 때 FDI 순유입액(단위:10억 달러)은 주어진 도로연장 스톡과 강한 양의 상관을 보임.
- 위에 열거된 요소들이 통제될 때, 전년도 도로연장이 10% 증가할 때 FDI 순유입은 약 20억 달러 (=19.8 x 0.1)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

○ 따라서 EDCF의 도로연장 확대를 통해 베트남의 FDI순유입이 1.74억 달러(0.87 x 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표 9〉 교통인프라 지원의 경제적 효과 추정 (패널분석 결과)

효 과	크 기
소득증가	1인당 GDP 0.21% 증가
빈곤율 감축	빈곤율 0.12%p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노동생산성 0.2% 증가
경제성장률 제고	경제성장률 0.064%p 증가
FDI유입 촉진	FDI 1.74억 달러 증가

2. 산업연관분석

1) 분석방법

- EDCF의 지원이 베트남의 관련산업에 일차적으로 최종수요를 유발하고, 그 효과가 다시 연관산업으로 파급되어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경제효과를 분석

- 효과추정을 위해 베트남의 최근 산업연관표(2007년)를 이용하였는데, 최근 베트남의 급격한 산업구조변화를 고려할 때 과거 산업연관표 사용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분석에서는 EDCF지원 사업이 건설산업, 기계 및 장비산업의 2부문에 직접 최종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지원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비중을 조금씩 다르게 가정함.
 - EDCF 사업에 설계 등 컨설팅 부분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비중은 현지 수요유발에서 제외함.

2) 분석결과

□ 생산유발 효과

- EDCF 전체 승인사업은 베트남에 약 71.3억 달러(2016년 실물가격 기준)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2016년 GDP의 약 3.5%, 그리고 EDCF 지원액의 약 3.3배에 해당
 - 교통분야 지원의 경우 39.2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GDP의 1.96%에 해당

□ 부가가치유발 효과

- EDCF 전체 승인사업은 베트남에 약 19.8억 달러(2016년 실물가격 기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2016년 GDP의 약 0.98%, 그리고 EDCF 지원액의 약 0.93배에 해당

- 교통분야 지원의 경우 11.3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GDP의 0.57%에 해당

□ 고용유발 효과

- EDCF 전체 승인사업은 베트남에 약 11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2016년 총고용자수의 약 2.09%에 해당
- 교통분야 지원의 경우 66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총고용자수의 1.2%에 해당

〈표 10〉 EDCF 지원의 경제적 효과 유발 추정 (산업연관분석)

효과	전체 지원 효과	교통부문 지원 효과
생산유발 효과	71.3억 달러 (GDP의 3.5%)	39.2억 달러 (GDP의 1.96%)
부가가치유발 효과	19.8억 달러 (GDP의 0.98%)	11.3억 달러 (GDP의 0.57%)
고용유발 효과	112만명 (총고용자수의 2.1%)	66만명 (총고용자수의 1.2%)

주) 베트남의 GDP 및 총고용자 수는 2016년 기준임.

III. 사례분석을 통한 개발효과 추정

1. 사례선정

- 베트남 사업의 60%를 차지하는 교통인프라 사업을 사례분석의 대상 분야로 선정하였음.

□ 교통분야 사업 중 2016년말 현재 사업비 집행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규모 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사업(HHE)과 빈틴교량사업(VTB)을 사례분석 사업으로 최종 선정

○ 교통부문에서 2016년말 현재 집행이 종료된 사업은 모두 5개

○ 이중 비교적 최근에 종료되고 사업규모가 각각 1억 불에 이르는 2개의 고속도로사업(HHE는 7구간과 10구간 두 사업으로 분리)과 1개의 교량사업을 선정함.

〈표 11〉 교통부문 사업 중 집행종료 사업 (2016년말 현재)

승인 연도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백만원)	금리 (%)	집행현황 (*17.4월 말 기준)
		백만원	백만불			
1995	18번 국도 개량사업	18,355	24.00	18,336	2.50	집행종료 (1999)
2008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7구간)	136,394	100.00	121,361	1.00	집행종료 (2016)
2009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0구간)	126,489	100.00	114,553	0.10	집행종료 (2016)
2009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109,809	100.00	101,474	0.05	집행종료 (2016)
2009	호치민-쑹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32,656	30.00	21,135	0.05	집행종료 (2015)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사업개요

○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동부지역과의 경제개발벨트 구축,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지역개발 추진에 따라 가중되는 교통 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 총 105km의 10개 구간 중 EDCF는 2개 구간 (제7 및 제10 구간) 18.5km의 건설을 지원함.

〈표 12〉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사업범위

구 분	세부 내용
제 7 구간	- 연장 9.3km 에 달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시점의 약 72km 동쪽 지점부터 81.3km 까지 위치한 하이퐁시의 안라오구(Anlao District) 지역을 통과 - 총 2개의 장대 교량과 2개의 횡단고가 건설(연장 1.7km)
제 10 구간	- 연장 9.117km에 달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종점, 고속도로 시점의 약 96.3km부터 딘부댐(Dinh Vu Dam)지역을 관통 - 총 1개의 장대교량과 2개의 횡단고가 건설(연장 1.6km)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08),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7구간 건설사업 심사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2009),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10구간 건설사업 심사보고서

□ 빈탄교량 사업개요

○ 하노이시의 홍강 횡단교량 및 연결도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하노이시 중심의 환상형 교통축을 형성함으로써 홍강델타 지역의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수도권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교량을 건설

- 하노이 중심지로부터 서북쪽에 위치한 손타이(Son Tay)시에서 시작하여 홍강을 횡단한 후 빈푹성 빈푹(Vinh Tuong)읍 지역 신설도로와 연결되는 5.5km (교량 4.4km, 접속도로 1.0km) 구간에 대해 EDCF가 지원

〈표 13〉 빈틴교량 건설 사업범위

구분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총연장	4.313km	5.487 km	4.510 km
사업 내용	하노이 손타이시 지역 2차선 기존도로 확장 (국도 NH32번 연결)	홍강 횡단교량(4.4km) 및 접속도로(1.0km) 건설	빈푹성 빈엔시 방면 신설도로 건설 (국도 NH2C번 연결)
총사업비	U\$8,590천	U\$137,181천	U\$13,050천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09), 베트남 빈틴교량 건설사업 심사보고서.

2. 분석결과

- 교통인프라 개선은 교통시간단축, 환경비용 절감, 투자재원 조달, 지역경제발전,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 등을 가져오고, 건설과정에서 현지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편익계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음.

1) 직접편익의 정량분석

□ HHE의 직접편익

- **(운행비용 절감 편익)** 하노이-하이퐁간 운행비용이 연간 약 560만 달러 절감된 것으로 추정됨 (EDCF가 지원한 18.4km 구간만의 효과임).
 - 평균속도가 과거 5번국도를 이용했을 때의 약 40km/h에서 약 100 km/h로 증가하면서 차량의 운행비용이 크게 감소
 - 거리단축의 효과는 제외하여 실제 효과는 이보가 더 클 것으로 판단

-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HHE 건설로 연간 총 275만 달러의 통행시간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이중 EDCF 기여분은 연간 48만 달러로 추정
 - HHE건설로 하노이-하이퐁 통행시간은 과거 138분에서 68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응답함.

- **(대기오염비용 절감 편익)** 교통속도의 향상으로 연간 99만 달러의 대기오염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 (EDCF 지원 구간만의 효과임.)

□ VTB의 직접편익

- (운행비용 절감 편익) VTB의 경우 교량 건설로 손떠이-빈딘간 (5.4km) 운행비용이 연간 약 61만 달러 절감된 것으로 추정됨.
 - 교량 건설전 페리 이용에 따른 유류비,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모터바이크의 절감편익도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

-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VTB의 건설로 연간 총 47만 달러의 통행시간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
 - 손떠이-빈딘간 통행시간은 교량건설 전 평균 37.5분에서 건설 후 평균 9.4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응답함.

- (대기오염비용 절감 편익) 교통속도의 향상으로 10만 달러의 대기오염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

〈표 14〉 HHE와 VTB의 비용절감 편익 추정

(단위: 만 달러)

효과	HHE (EDCF지원 구간)	VTB
운행비용 절감	560	61
통행시간비용 절감	48	47
대기오염비용 절감	99	10

2) 간접편익의 정성분석

□ HHE와 VTB의 간접편익

- **(재원 확보)** 베트남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1-2020년에 연간 160억 달러(ADB추정)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양호한 금융조건의 EDCF지원은 재원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현지고용 및 구매창출)** VTB와 HHE의 현지화비율은 각각 77%과 66%로 높아 현지 인력 및 구매창출 효과가 매우 컸으며, 특히 PM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현지 회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고용 인력의 95% 이상이 현지인으로 구성
- **(기술이전)** HHE나 VTB의 범용기술의 경우 직접적 건설기술 보다는 사업관리역량, 안전 및 환경관리 능력, 품질관리 능력 등의 측면에서 현지기업 및 인력의 인식제고와 역량향상이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사장교인 밤콩교량건설과 같이 중위이상의 기술이 요하는 사업의 경우, 현지 하청기업에게 다양한 건설기술과 시공방법(예, 선형관리, 강교제작, 강교설치, 주탑건설기술)이 직접적으로 이전됨.
 - 또한 하청기업은 랜드마크 사업의 참여, 한국기업 주도사업의 참여로 기업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국내 및 해외의 타사업 수주에도 긍정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

- **(주민 삶의 질 개선)** 교통시간 단축이 주민 삶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
 - 특히 교통개선으로 대도시의 양질의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
 - HHE 운전자의 경우 교통위험 감소,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
 - 하지만, 민자사업인 HHE의 경우 비싼 통행료로 인한 교통비용 증가, 이주 및 토지보상 과정의 갈등 등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함.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HHE는 주변 지역 FDI 유치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외국기업 투자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이로 인한 고용증가를 아직 체감하지는 못하는 반면, 운전자나 입주기업은 HHE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
 - 하지만, VTB처럼 소규모 도시의 경우 교량건설로 차량이나 사람의 지역 체류 시간은 짧아지고, 대신 단순통과 교통이 증가해 주변지역 (특히 구 선착장 주변) 경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분석의 한계)** 통계의 부족,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비교대상 설정의 곤란)** EDCF지원 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원이 없을 경우(counter-factual)의 상황과 비교해야 하지만 이 상황의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전후(before-after)비교의 방법을 사용
 - **(평균효과 가정)** 교통인프라 등 지원의 효과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패널분석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계효과의 크기가 개도국 평균과 같다고 가정하고 분석
 - **(일부부문 효과만 추정)** 지원 부문이 다양하지만 각 부문의 고유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패널분석에서는 교통인프라의 효과에 국한해 분석
 - **(산업구조 변화 미반영)** 베트남의 최신 산업연관표가 2007년에 작성되어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그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사례분석의 한계)** 특정 사업의 평가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례 분석에서 약식 평가만 이루어져 이해관계자의 설문대상 수가 작고 사업의 간접적 영향을 받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IV. 국별 효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 **(필요성)** 개별 수원국에 대한 전체 원조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를 가늠하는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
 - 수원국과 그 효과를 공유하고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한계와 유의사항)** 국별 정량효과 분석은 그 유용성과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엄밀성 확보를 위한 주의가 필요함.
 - 국별 정량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 때문에 정확한 효과추정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효과발생 경로의 불확실)** 지원한 원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 혹은 메커니즘을 통해 성장, 개발,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움.
 - **(국별 특수성)** 이론적으로 정립된 효과발생 경로가 있다고 해도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비일반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기 어려움.
 - **(비정량적 효과)** 개발의 효과 중 정량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모두 포괄할 수 없음.

- (통계의 부족)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다양한 국가단위 통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추정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가 부족함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
 - (사업의 다양성) 사업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면 효과발생의 논리적 구조를 다르게 설정하고 추정해야 하지만, 자료, 예산,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움.
-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정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형이 설정한 논리의 현실 적합성임.
- 효과의 정량적 추정을 위해 다양한 경제모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음.
 -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모형의 논리적 구조와 가정의 현실성임.
 - 이런 점들이 부실할 경우 추정결과는 공여국이나 수원국에서 오히려 평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적절한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도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결과와 더불어 분석의 한계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차 검증, triangulation) 국가 단위 효과의 추정을 위한 완벽한 모형은 없기 때문에 복수의 분석방법을 통해 결과들을 교차 검증

하고, 추정치의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대상 국가 선정) 지원효과에 대한 정량 분석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지원의 규모가 비교적 커 그 나라 전체 경제나 특정 산업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 기본적 경제지표(거시경제, 인프라, 보건 등 분야별 통계), 주요 산업의 통계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 가능하고, 이들 지표에 대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계열이 구축된 국가

- 최소한 산업연관표 정도는 이용 가능한 국가가 바람직할 것임.

○ 사업이 비교적 동질적이며 효과발생의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국가

참고문헌

국내문헌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에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16. “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지도6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2009. “빈티교량건설 심사보고서”
- 한치록 (2017). 『패널데이터 강의』, 박영사

해외문헌

- 베트남 정부,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2020년까지의 교통개발전략 조정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QUY HOẠCH PHÁT TRIỂN GIAO THÔNG VẬN TẢI ĐƯỜNG BỘ VIỆT NAM ĐẾN NĂM 2020 VÀ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30)』, (2013년 수정)
- ADB (2012), “Vietnam transport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Asian Development Bank, p. 13.
- Arellano, M., and S. Bond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91, vol. 58, issue 2, 277-297.
- Asian Development Bank. 2013. Cost-Benefit Analysis for Development: A Practical Guidebook.
- The Viet Nam Development Bank and Investors, “하노이-하이퐁 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The Ha Noi - Hai Phong Expressway
- Vietnam net (2015.9.10.), “Vietnam's transport development in a mess”,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40999/vietnam-s-transport-development-in-a-mess.html>).
- Vietnam Net (2017. 5. 15), “Hanoi-Hai Phong Expressway investor grieves over lack of support”,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78287/business-news-15-5.html>)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http://reports.weforum.org/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4-2015/rankings>)

웹사이트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 (접속일 : 2017년 9월 11일)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and KSP)의 개최 결과 및 의의

안주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I.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개요

2017년 9월 5~6일, EDCF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행사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행사는 1987년 개도국 인프라개발 지원 등을 통한 경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EDCF의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EDCF와 KSP의 26개 협력국 정부 대표자(장·차관 등), 현지 주민들과 기업,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인사, 주한 외교사절 관계자 등 국내외 8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국제행사는 기조연설, 학술발표 등 기존의 국제컨퍼런스 진행방식에서 탈피하여 치러졌다. EDCF와 KSP 당사자인 26개 협력국 정부 관계자, EDCF 지원의 수혜를 받은 현지주민¹⁾, EDCF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 참여한 우리 및 현지기업²⁾ 관계자,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이 행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인 본행사 당일에는 지난 30년간의 EDCF와 KSP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EDCF의 중장기 발전방향인 <EDCF 비전 2030>을 일반에 선포하였다. 또한 <EDCF 비전 2030>의 수립배경과 성공적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정책좌담회가 이어졌다.

한편 부대행사로 주요 협력국 투자설명회(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및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개최하여 해외진출 관심기업들에게 협력국 진출전략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진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 둘째날 민관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민관협력(PPP)방식 금융지원 사례/전략 및 주요 협력국 내 PPP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EDCF 30주년을 기념하여 일반에 EDCF 30년사를 발간·배포하고, KBS 특집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으며 EDCF 30주년 특별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ODA 관심층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벤트를

-
- 1) EDCF 지원을 통하여 건립된 한국-베트남 직업훈련학교 재학생인 응웬 티 투(Ms. Nguyen Thi Thu) 양,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에서 벗어난 시암포네 쟁각훈(Mr. Siamphone SENGTAKHOUNE) 씨 등이 본 행사에 초청되었다.
 - 2) 인도네시아 까리안(Karian) 다목적 댐 건설사업의 현지수행기업인 PT WIJAYA KARYA Tbk(수자원 등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공기업) 관계자 등이 본 행사에 초청되었다.

마련하여 EDCF 개발효과성 부각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썼다.

〈표 1〉 행사 주요 프로그램

시간	9월 5일(화)	시간	9월 6일(수)
14:00-15:00	개회식/비전선포식 (14:00-15:00)	09:00-10:00	
	Coffee Break	10:00-11: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09:30-11:20)
15:00-16:00	EDCF/KSP 정책좌담회 Roundtable with Friends of EDCF/KSP (15:20-17:00)	11:00-12:00	Coffee Break
16:00-17:00		11:30-12:40	민관협력 포럼 (11:30-12:40)
	Coffee Break	12:00-13:00	오찬 (12:40-13:40)
17:00-18:00	협력국 투자설명회 (17:20-18:50)	13:00-14:00	
18:00-19:00	EDCF 분과 1 (아시아)	14:00-15:00	
	EDCF 분과 2 (중남미/ 아프리카)		
KSP 분과 1 (이란)			
KSP 분과 2 (카자흐 스탄)			
KSP 분과 3 (니카라과)			
19:00-20:30	갈라 디너 "상생의 밤" *초청자 한정 (19:0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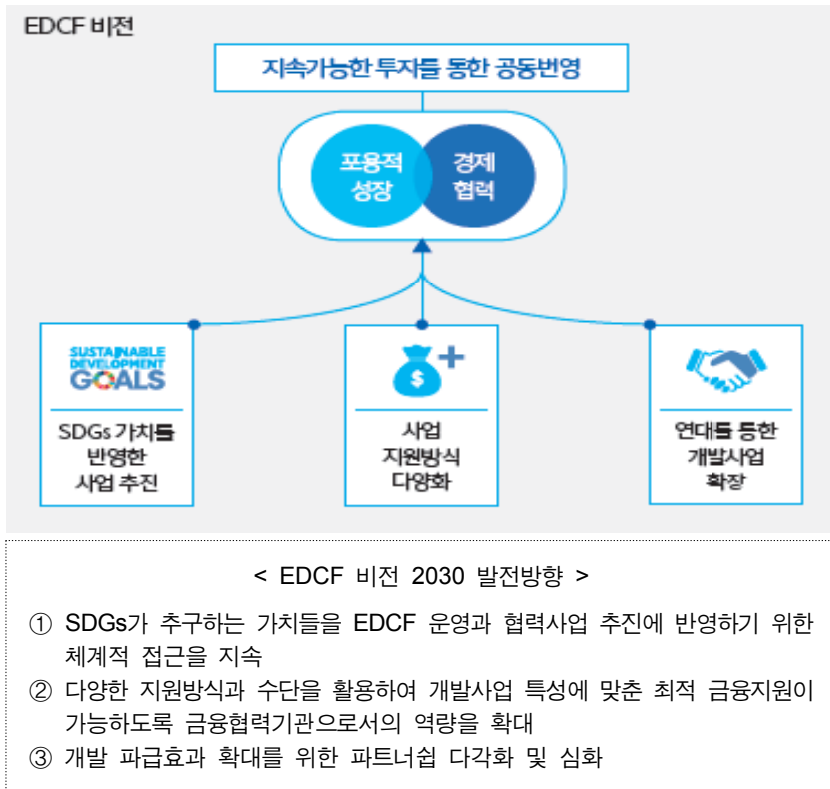
II. 국제행사 본행사

가. 장기비전 〈EDCF 비전 2030〉 공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식에서 EDCF/KSP의 그간 운영성과, 향후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비전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중심가치를 고려한 사업추진, 인프라 건설(유형)과 지식협력(무형)의 연계 활성화뿐 아니라 양·다자 국제 기구 및 민간부문과의 연대 강화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림 1〉 EDCF 비전 2030 및 중장기 발전방향 개관



EDCF 성과 및 비전 발제에 이어 비전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은 EDCF 주요 지원분야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협력국의 변화 전·후 모습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한 공동번영을 주제로 제작되어 비전선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뒤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EDCF 중장기 발전전략 슬로건을 선포하는 손도장 찍기 세레모니를 가졌다.

〈사진 1〉 비전선포식 현장 주요사진



나. 정책좌담회(Roundtable with Friends of EDCF/KSP)

비전 선포식에 이어 EDCF/KSP 정책좌담회가 이어졌다. 허경욱 전 OECD 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지원성과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수원국, 현지기업, 양·다자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응웬 쯔 중(Mr. Ngyu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빈탕 퍼보오(Mr. Bintang Perbowo) 위자얀 까리안³⁾(PT WIJAYA KARYA Tbk) 사장, 악셀 반 트로젠버그(Mr. Axel van Trotsenburg) 세계은행 부총재, 마리오 페찌니(Mr. Mario Pezzini) OECD 개발협력

3) 수자원 등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인도네시아 공기업

센터 소장 등 EDCF/KSP 주요 이해관계자 4인의 발제가 있었다. 뒤이어 EDCF/KSP 발전방향 및 향후 국제개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수원국 정부, MDB, 양자원조기관 등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2〉 정책좌담회 현장 주요사진



〈표 2〉 정책좌담회 주요 발언요지

<p>응웬 쩌 중 (Mr. Ngyu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p> <p>한국의 ODA 지원은 베트남의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역량 강화, FDI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함. 베트남은 앞으로 인프라 구축, 베트남 경제부문의 국내외 연결성 증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함.</p>
<p>빈탕 퍼보오(Mr. Bintang Perbowo) 위자얀 까리안(PT WIJAYA KARYA Tbk) 사장</p> <p>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EDCF 사업인 까리안(Karian) 다목적 댐 건설사업을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 받았음.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바, 향후 EDCF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협력기회가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함.</p>

<p>악셀 반 트로젠버그(Mr. Axel van Trotsenburg) 세계은행 부총재</p> <p>막대한 SDGs 이행재원 충족을 위해 MDB들은 개발재원의 제공을 넘어 공공·민간의 개발재원 동원에 집중하고 있음. 개발금융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EDCF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역동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발재원 동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함.</p>
<p>마리오 페찌니(Mr. Mario Pezzini) OECD 개발협력센터 소장</p> <p>한국은 ODA의 양적확대 및 개발경험 공유라는 독특한 자산을 바탕으로 국제 개발에 기여함. 성장 과도기에 도달한 개도국의 개발과제를 검토하고 공여국간 다양한 개발수단을 아우르는 정책대화가 필요함.</p>
<p>이반 아코스타 몬탈반(Mr. Ivan Acosta Montalvan) 니카라과 재무부 장관</p> <p>EDCF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EDCF의 인프라 투자, KSP의 개발 영감 공유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함.</p>
<p>장영훈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본부장</p> <p>EDCF 비전 2030은 개도국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빈곤의 의미 변화, 성장·분배의 균형 있는 매트릭스 필요성 등 새로운 개발협력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원조 지원절차에 대한 무성한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개발성과 중심의 활동이 중요하며, 이는 개발사업 맥락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함. EDCF의 새로운 비전은 현지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개발 파급효과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p>
<p>카이 프룟챗(Mr. Kai Preuschat) 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융자실 국장</p> <p>확대된 개발재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함. EDCF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추구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개도국 현지은행, 연기금 등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화 금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p>
<p>입스 기케로(Mr. Yves Guicquero) 프랑스개발은행(AFD) 전략본부 본부장</p> <p>엔타이드 지원 강화, 기후금융 확대, 양자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EDCF의 새로운 비전은 AFD와 EDCF의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
<p>코키 히로타(Koki Hirota)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수석이코노미스트</p> <p>JICA의 2017 개발협력 비전은 상당부분이 EDCF 비전과 유사하므로 향후 양 기관의 협력 확대를 기대함. EDCF는 수출입은행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PPP 등 혁신적 금융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III. 4개국 원조기관 회의

2017년 제7차 4개국 원조기관 회의⁴⁾는 EDCF 협력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4개국 공여기관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삼각협력으로 본 아시아 원조기관간 협업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원조기관 회의는 유상차관을 지원하는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 원조기관들은 기관별 최근 개발협력 운영성과 및 향후 전략을 공유하고 육상 광역 인프라 개발사업, 베트남 개발을 위한 6 Banks 협의체 등 다양한 협업 사례를 예시로 들며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개별 원조기관의 개발협력 우선순위가 아시아(지역) 및 인프라(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단위(project level)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행동방안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되었다.

4) 한국 EDCF, 중국 수출입은행(CEXIM), 일본 JICA, 태국 경제개발협력청(NEDA)이 공동 참여하는 아시아 역내 협의체

- ① 사업 발굴/준비 단계부터의 정보공유를 통해 협조용자, 공동 F/S 지원 등 효과적인 협업방안 모색
- ② 기관별 상이한 구매, 집행 절차 등의 난관 극복을 위해 parallel 금융방식의 효율적인 사업구조 설계
- ③ 원조기관별 사업경험의 적극적 공유를 통한 협업 기회 증대

세부 사업단위로 협업시, 기관간 금융조건 차이 등 조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 등 일부 면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나, 이는 삼각 협력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협업으로 인한 편익이 비효율성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협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차기 회의시까지 지속적으로 협력가능 분야와 지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협의하였다.

IV.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EDCF는 차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1회 개도국의 차관도입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개도국 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는 EDCF의 지원방향 및 절차를 설명하는 EDCF 정책세미나,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답사하는 산업현장 시찰 및 문화 탐방 등으로 이루어지며 1995년 처음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47개국 292명의 개도국 공무원이 참여한 바 있다.

2017년 제 21차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는 국민 및 EDCF 협력국가들의 관심 집중 유발을 위해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와 연계 개최되었다. 베트남, 인도 등 17개 개도국 개발협력 담당 고위 공무원이 초청되었으며 초청연수에 앞서 국제행사 본행사에도 참관하여 EDCF 지원성과 및 향후비전 공표를 함께 하였다. 특히 몽골, 방글라데시 등 8개국⁵⁾ 공무원은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의 부대행사인 1대1 비즈니스미팅에 참여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앞 협력국 국가개발전략 및 인프라 건설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국제행사에 연이어 개최된 EDCF 정책 세미나에서는 수은 EDCF 담당자가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EDCF 역할 및 전략 등을 자세히 소개한 후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초청연수 참가자들은 이튿날 한국 경제발전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흥 에너지파크와 인천대교 기념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하여 한국경제 발전경험을 답사하고 체험하였다. 또한 환영·환송 만찬을 통해 개별 EDCF 사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하고 향후 협업 증진을 도모하였다.

5)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케냐, 니카라과, 온두라스, 미얀마

V. 마무리

“EDCF: Your Best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riend”가 이번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시 공표된 <EDCF 비전 2030>의 슬로건이었다. 이는 그간 EDCF 지원성과의 핵심요인과 비교우위를 규명하고 최근 개발협력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EDCF 진화의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공동 번영을 꾀한다는 EDCF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EDCF는 새로 발표된 <EDCF 비전 2030>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발굴·시행시 SDGs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금융협력 확대와 더불어 지식 공유,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을 추진하고, 다양한 그룹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EDCF는 개발사업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SDGs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EDCF는 양허성 차관 중심의 여신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금융 수단과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개발사업 맥락에 최적화된 금융을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의 EDCF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재원 동원과 혁신적 솔루션 도출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DCF는 지난 30년간 격변하는 개발협력환경에 적응하여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다가올 30년에도 EDCF가 개도국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와 균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DCF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은경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은경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1.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² (한반도의 3.5배)	GDP	2,880억 달러(2016년)
인구	194백만 명(세계 6위)	1인당 GDP	1,488 달러(2016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다당제)	통화단위	Pakistan Rupee(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02.77(2016년)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도 세계 6위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함.
- 인도와의 카슈미르 영토 분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세력의 위협 등 테러와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f
경제성장률	3.7	4.1	4.0	4.7	5.0
소비자물가상승률	7.4	8.6	4.5	2.9	4.3
재정수지/GDP	-8.4	-4.9	-5.3	-4.3	-4.3

주: 회계연도(전년도 7.1~6.30) 기준

출처: IMF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본격 시행과 내수진작에 힘입어 '16년** 경제성장률 4.7%를 시현하였으며, 향후에도 민간 소비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5%대 성장 전망

*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1~6.30

○ CPEC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인도양과 아랍해의 관문인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 이어지는 도로, 경제특구, 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한 5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16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30개 사업 중 16개 사업이 착수됨.

○ 파키스탄은 인프라 개발을 통한 전력난 해소와 중국자본 유치, 물류허브로의 발전을 위해 CPEC 사업에 적극적이며, World Bank, IMF 등은 CPEC에 따른 투자확대*로 파키스탄 경제가 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50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730억 달러로 이는 '16년 파키스탄 GDP(2,880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임(BMI).

** 실질GDP성장률 예상치(IMF, %): 5.0 ('17년) → 6.0 ('19년) → 5.9 ('21년)

○ GDP의 84%를 차지('15년 기준)하는 민간소비 또한 해외근로자의 송금증가로 3% 후반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정부지출 또한 '18년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 GDP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 '16년 송금액은 199억 달러로 '15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SBP, 파키스탄중앙은행), 파키스탄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전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임('15년 기준, World Bank).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6년 2.9%로 '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나 유가회복에 따른 상승압력 존재

○ '08년 국제원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시 에너지수입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하였으나, 같은 해 금융위기와 '14년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세*를 이어 왔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 12.0 ('08년) → 7.4 ('13년) → 2.9 ('16년)

- 그러나 에너지 수입액이 상품수입액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유가회복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년 4.3%, '20년 까지 5%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 CPEC 사업 투자와 '18년 총선을 염두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 '13~16년 IMF 구제금융시 세수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정부수입 확대로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4%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CPEC 사업에 대한 정부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18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년 -5%로 높아지고 향후 적자폭도 확대될 수 있음.
 - 파키스탄 정부 또한 '17.5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8년과 '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목표치를 기존의 -3.8%, -3.5%에서 -4.2%, -4.1%로 각각 하향 조정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투자재원 부족과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저축률이 낮고* 금융시장 또한 낙후되어 공공 및 민간부분 투자를

위한 자본이 부족하고 정부의 세수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정부의 부채감당능력이 제한적임.

* '16년 GDP 대비 저축 비중(%)은 8.1로 인접국 인도(28.9), 방글라데시(25.0), 스리랑카(23.8), 부탄(27.4)에 비해 현저히 낮음(World Bank).

- 또한 CPEC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중국정부 앞차관 상환, 중국기업 앞 보증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음.

○ 민간소비 또한 해외근로자 송금에 크게 의존하여 송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송금액 급감으로 민간소비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음.

*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 한편,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아 유가변동에 매우 취약하여 최근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가 끝날 경우 수입액 급증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

* 파키스탄은 국내수요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연 50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 가격 상승 시 수입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보유한 서남아의 거대 잠재시장

○ 파키스탄은 세계 6위 인구대국*으로 '17년 이후 인구가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45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

* 세계 인구 상위 6개국(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順)이 전세계 인구의 50%를 차지

- 또한 18~29세 청년층 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도시화*도 가속화되어 향후 구매력 증대와 민간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 전체 인구 대비 도시거주자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50년 까지 6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UN)

** 1인당 GDP가 현재 1,500달러에서 10년 내로 2,000달러를 넘어서고, 민간 소비도 연간 6.5% 이상 성장할 전망(BMI)

○ 석탄, 천연가스, 구리, 금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인프라 개발과 기술확보 시 자원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수출도 가능함.

* 석탄 매장량 전세계 2위(BMI), 천연가스 매장량 전세계 30위(CIA) 등

-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가스, 석유, 석탄의 순수입국으로 자원개발로 수익원 창출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대외경제 취약성을 극복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 정책성과

□ IMF 차관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과 국제시장의 긍정적 평가

○ 파키스탄은 '16.9월 3년간의 IMF의 확대신용협약(EFF*)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총 약정액 67억 달러를 모두 지원받음.

* Extended Fund Facility : 일시적인 외환부족시 지원하는 대기성차관 (Stand-By Arrangement)과는 달리 구조적인 외환부족 문제 발생시 지원하며, 차관지원을 위한 정책권고안 또한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됨.

- 파키스탄은 '58년부터 가장 최근인 '13년 프로그램까지 20번이나 IMF의 자금지원 약정을 받았으나 정책권고를 이행하지 못해 지원액을 전액 수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약정액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6번이며, 이번 EFF 이전인 '08.11월 지원을 약정받은 7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SBA) 또한 정책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68%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한 채 '11.9월 종료됨.

- 이번 EFF 약정액 전액 인출에 대해 국제신용평가 3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IMF는 '13.9월 파키스탄 앞 EFF 지원결정 이후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된 정책조건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며, 정책 조건*에는 성장, 물가, 외환보유고 확충, 세계개혁 등의 이슈가 포함됨.

* 주요 조건 : '16년까지 경제성장률 5% 달성, 소비자물가상승률 6~7%대로 억제, 세제 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

- IMF는 '16.9월 최종 점검에서 파키스탄이 지난 3년간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대외경제 취약성 완화, 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경제구조 개혁동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함.

3. 대외거래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원유 등 수입 증가로 큰 폭의 상품 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2016년 37억 달러),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2016년 23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2016년에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6.8%) 대비 다소 하락한 -6.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f
경 상 수 지	-4,416	-3,616	-2,112	-5,036	-11,666
경상수지/GDP	-2.0	-1.5	-0.8	-1.8	-3.7
상 품 수 지	-16,099	-17,877	-16,677	-19,910	-26,501
수 출	25,115	24,777	22,706	21,709	21,704
수 입	41,214	42,654	39,383	41,619	48,205
외 환 보 유 액	5,156	11,807	17,830	19,650	17,392
총 외 채 잔 액	60,057	62,262	65,482	70,451 ^e	75,657
총외채잔액/GDP	27.3	25.0	24.5	24.5 ^e	24.2
D S R	26.3	18.2	12.8	17.1 ^e	23.0

주: 1. e=잠정치, f=예상치

2. 연도는 모두 파키스탄 회계연도 기준(전년도 7.1~6.30).

자료: IMF, EIU.

□ 섬유수출 부진과 CPEC관련 자본재 수입 급증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심화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섬유산업*의 대외원자재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산비용도 동반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자본재 수입이 늘어남.

*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차지 하며 정부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Industry)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파키스탄의 핵심 산업임.

- 상품수지 적자가 '16년 -199억 달러에서 '17년 -265억 달러로 33%이상 증가함.

□ 내수경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수출성장률은 담보

- 수출주도성장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총수출/GDP(%) : 10.9 ('15년) → 9.5 ('16년) → 8.9 ('17년')

- '17년 총수출 증가율은 이전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함.

* 총수출증가율(%) : -5.9 ('15년) → -6.2 ('16년) → 0.8 ('17년')

□ 외환보유액은 IMF 구제금융시기에 비해 4배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 '13.9월 IMF가 67억 달러의 차관(EFF) 제공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IMF지원과 중국의 FDI에 힘입어 '16년 외환보유액은 19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남.

- 그러나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IMF의 최소권고기준인 3개월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17년에는 전년 대비 외환보유액 감소로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전년 4.3개월에서 3.3개월로 하락할 전망이다.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총수출 정채와 외채원리금상환액 증가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은 '17년 24.2%^f로 지난 5년간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

* 총외채잔액/GDP(%) : 27.3 ('13년) → 24.5 ('15년) → 24.2 ('17년^f)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40% 미만으로 양호하며,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 미만으로 중장기외채 비중이 높은 점은 긍정적인 점.

○ 그러나 '17년 이후 중장기 채권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유로본드와 이슬람채권(총 27.5억 달러 규모)의 만기가 '17~20년 사이에 도래하며 IMF 앞 62억 달러, 파리클럽 리스케줄링(상환 일자조정)에 따른 117억 달러의 상환도 '17년 이후 시작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샤리프 전 총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신임총리와 집권여당의 세력이 견재하여 정치적 안정 유지

○ 샤리프(Sharif) 전 총리는 '16.4월 공개된 파나마문서로 인해 탈세

및 불법역외자산 소유 혐의로 '17.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리직을 상실하고 압바시(Abbassi) 전 석유천연자원부 장관이 8.1자로 신임 총리에 선출됨.

○ 압바시 내각에는 샤리프 전 총리 당시 장관들이 대부분 잔류하였으며, 샤리프 전 총리가 당수였던 집권여당(PML-N) 또한 하원의석 57%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편잡(Punjab) 주 의석 또한 85%이상 점유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18년 총선에서도 현 집권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부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

○ 집권여당은 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무난히 제1당을 수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지원과 투자에서 소외된 지방(발루치스탄, 신드 주 등)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 차기 정부에서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 요소가 상존함.

○ 최초의 민간선출 총리였던 샤리프 총리의 퇴진 이후 군부 정치 개입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18년 총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민간선출 총리 앞 정권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샤리프 총리는 3선 총리로 두 번째 임기('97~02년)중인 '99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음.

- 그러나 군부가 국내정치, 안보, 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CPEC의 성공적 이행에도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인 것을 감안 시 향후 동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를 제외하고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상황으로 지역별 테러 양상 상이
 - 아프간 인접 파키스탄 탈레반 중심의 테러, 경제중심지 카라치 지역의 갠단·종파간 테러, CPEC사업의 핵심인 과다르항이 위치한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주의자 테러, 편잡 주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인도 테러로 구분할 수 있음.
-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의 강경한 대테러 정책으로 테러 발생 빈도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정부는 '16.1월 대 테러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육군 또한 '14년부터 3년간 대 테러 작전을 이행한 데 이어 '17.2월부터 새로운 대 테러 작전에 돌입함.
 - '16년 테러발생 빈도는 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고 사망자 역시 2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음.

* Soft target :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행위를 말하며,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하드 타겟(Hard target)과 반대되는 개념.

3. 국제관계

□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을 가장 신뢰하는 우방으로 간주하고 CPEC을 비롯한 경제적 협력 강화

○ 파키스탄은 CPEC으로 인해 기존 미-중 양국간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던 노선에서 벗어나 친중국 노선으로 외교의 중심축을 옮긴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은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함.

* 중국은 파키스탄의 제3위 수출상대국, 제1위 수입상대국, 제1위 FDI 투자국임('16년 기준).

○ 중국은 인도 견제와 에너지 수급망 구축을 위한 안보 강화, 낙후된 중국 북서부 지역발전에 따른 정치·사회적 안정 강화 등의 측면에서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11~15년 중국 무기판매의 35%를 차지했으며, 인도와의 군비 경쟁을 감안 시 향후 중국산 무기 구매와 군사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인도와는 휴전상태인 카슈미르 문제와 핵보유 경쟁으로 대화 재개와 중단을 반복

○ 파-인 양국은 3차례의 전쟁 경험*과 카슈미르 영토 분쟁으로 즉각적 관계개선이 요원하여, 최근 파-인 통제적 인근에서 양측 간 무력 충돌로 민간인 및 군인 피해가 발생하여 외교안보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 1948년 제1차 전쟁과 1965년 제2차 전쟁은 카슈미르 문제로 1971년 제3차 전쟁은 방글라데시 분리독립 문제로 발생함.

○ 인도가 '16.12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파키스탄 또한 '17.1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대응하며 핵무기 고도화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미국의 친인도 기조 등에 따라 기존 미-파간 대테러 협력관계는 혼조세

○ 미국은 파키스탄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파키스탄 앞 많은 원조 자금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세력 억제를 위해 파키스탄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친인도 기조 이래 트럼프 행정부도 '17.6월 열린 미-인 정상 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는 등 인도와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17.8월 아프가니스탄과 서남아 신전략*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을 '아프간 테러단체의 은신처'로 지칭하며 동반자 관계 폐기 등 대 파키스탄 정책 전환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파키스탄 내 미국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알카에다가 숨어있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현재까지 아프간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대신 공세 강화와 병력 증강을 천명하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제 역할을 요구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ECA금융 연체 등 외채상환태도가 불량하며 CPEC 사업에 따른 외채 증가 위험

○ 총 6차례의 파리클럽 리스케줄링과 20차례의 IMF 지원 등 만성적인 외채상환능력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OECD 회원국 ECA의 금융지원액에 대한 연체비율도 높음.

- '17.3월 OECD 회원국 앞 ECA 앞 외채잔액은 41.9억 달러, 연체비율은 38.5%로 '16.3월 수준(잔액 45억 달러, 연체비율 40.7%)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 '16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4.4%로 높으며 외화표시 채권 또한 전체 부채의 28.3% 수준으로 향후 CPEC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차입이 늘어날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 및 외채상환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OECD는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대외경제 취약성과 경상수지 적자, 열악한 사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7등급을 유지함.

* 파키스탄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6-2017 순위가 전체 190개국 중 144위로 매우 낮으며, 이 중 전력수급, 재산등록, 대외 무역은 170위 미만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

-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 또한 샤리프 정권의 경제개혁 성과와 IMF 프로그램 이행 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경상수지 적자, 낮은 외환보유고, 취약한 정부 거버넌스 등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끌어 투자부적격 등급인 기존의

B3, B 수준을 유지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7. 6)	7등급 (2016. 6)
Moody's	B3 (2017. 7)	B3 (2015. 6)
Fitch	B (2017. 2)	B (2016.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83년 11월 7일 (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68.10), 해운 협정('84.3), 문화협정('85.5), 과학·기술 협력 협정('85.5), 경제과학기술 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85.5), 사증면제협정('85.5), 이중과세방지협정('87.4), 투자보장협정('88.5), 항공협정('96.7), 무상원조 기본협정('12.12), 유상원조 기본협정('15.10)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 6월말 누적 기준 166.3백만 달러(49건)

- 교역규모
 -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로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제품의 현지시장 잠식과 치안불안에 따른 우리

무역활동 위축으로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에 따라 대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의약품, 기계·철강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류와 농식품임.

** 교역규모(억 달러) : 16.2 ('12년) → 13.4 ('13년) → 11.7 ('14년) → 10.8 ('15년) → 11.1 ('16년)

○ '07년 파-중 FTA 발효 이후 중국은 매년 10% 이상의 대 파키스탄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살펴보면 한국은 파키스탄 수입시장 점유율이 '01년 3.2%에서 '15년 1.4%로 축소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8%에서 27.6%로 비약적으로 성장함.

V. 종합 의견

□ 파키스탄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민간소비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16년 4.7%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08년 10% 이상 수준에서 '16년 2.9%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향후 유가회복시 즉각적인 소비자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

- IMF 구조개혁 정책이행에 따른 세수제도 개편 등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었으나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문제는 여전하며, CPEC 사업과 '18년 총선을 앞둔 정부지출 확대는 총부채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상승시키고 외채상환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수의 리스케줄링과 ECA 앞 연체경험을 감안시 외채증가추이와 경상수지적자 확대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외환 보유액도 확충하여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등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인도와의 국경분쟁, 각지의 테러 등 사회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사업환경도 열악하여 투자심리개선 및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는 아직 요원한 상황임.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I. 일반개황

면적	237천 Km ²	G D P	145억 달러 ('16년)
인구	6.9백만 명 ('16년)	1인당 GDP	2,096달러 ('16년)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통화단위	Kip(K)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8,129 ('16년 평균)

-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미얀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투자 및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사회주의 국가로 라오인민혁명당(LPRP)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태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한때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으나,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구리,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통한 태국으로의 전력 및 광물 수출, 관광업의 활성화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2013년 2월 WTO 가입, 2015년 10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창립회원국 자격 획득, 동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공동발족 등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증가로 7% 내외의 성장세 지속

○ 광물과 수력발전 생산량 증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건설업 호조,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2010년 이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2014~15년에는 광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구리가격이 하락* 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내수시장 위축 등을 초래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4~7.5%로 둔화됨.

* 동 기간 중 평균 19.6%의 가격 하락세 시현

○ 2016년에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순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비엔티안-중국 쿤밍 철도 건설사업 등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 등 내수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저유가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

○ 라오스는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기준 수입액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1.2%로 매우 높아 태국의 물가 수준이 라오스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2014년에는 식료품, 원자재 등 수입물가 하락,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도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1.3%를 기록함.

* 국제 유가(WTI, 달러/배럴): 98.0('13년)→93.2('14년)→48.7('15년)→43.3('16년)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식료품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며 1.5%를 기록함.

□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 비효율적 조세제도,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38억 달러 규모의 Xayaburi 수력발전 사업의 최종 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13억 달러 규모의 Nam Ngum 수력발전 사업과 6억 달러 규모의 Don Sahong 수력발전 사업은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건설이 시작됨. 동 사업은 모두 2019~20년에 완공될 예정임.

- 2014년에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 인프라 사업 추진 연기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4%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제 구리가격 하락으로 광업부문 정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동 비율은 -4.8%로 소폭 확대됨.

○ 2016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광업 부문의 정부수입 축소와 함께 재정 긴축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6.5%를 기록함.

- 2015년 기준 광업제품과 전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7.4%와 18.7%이며, 2016년 4분기 현재 정부수입 중 광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력발전 부문 비중보다 높음.

〈표 1〉 주요경제지표

단위: %

구 분 ^{주)}	2013	2014	2015	2016	2017 ^f
경제성장률	8.5	7.5	7.4	6.8	6.7
소비자물가상승률	6.4	4.1	1.3	1.5	2.2
재정수지/GDP	-6.0	-4.4	-4.8	-6.5	-6.2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태국 및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6년 기준 태국이 라오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3%와 61.2%로 태국의 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갖고 있음.

- 수치상으로는 7% 내외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임.

* ODA 원조액(백만 달러): 410('12년) → 423('13년) → 474('14년) → 471('15년)

중앙정부 지출액 대비 ODA 비중(%): 36.8('12년) → 21.1('13년) → 24.2('14년) → 22.0('15년)

총투자액 대비 ODA 비중(%): 13.9('12년) → 13.0('13년) → 13.5('14년) → 11.6('15년)

□ 열악한 사업환경 및 인프라 등이 기업 활동 저해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16년 발표)에 의하면 라오스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39위로 여전히 하위권임.

- 사업청산(169위), 소액투자자보호(165위), 사업개시(160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보여 사업환경이 열악함. 다만, 건설허가(47위), 재산권등록(65위)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발표년도 기준 2013년 159위, 2014년 148위, 2015년 134위를 기록하는 등 사업환경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인프라 부문 하위(138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으며, 사업상 애로요인으로는 숙련노동력 부족, 열악한 근로윤리, 자금조달 어려움 등이 제시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삼림과 광물 자원

-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41.5%가 숲으로 이루어져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수자원이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 또한, 구리, 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2016년 기준 광업제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2.2%에 달함.

□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업 활성화와 발전 가능성

-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비엔티안(Vientiane), 참파삭(Champassak) 등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수입은 2010년 3.9억 달러에서 2016년 사상 최고인 7.1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관광업은 광업, 수력사업과 함께 라오스의 3대 산업으로서, 정부는 주요 관광지 인근으로 국제공항 건설, 메콩강 유역 주변 국가 간 관광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상품·서비스 수출액 대비 관광수입 비중은 2013~16년 평균 14.3% 기록

다. 정책성과

□ WTO 가입 및 FTA 확대 추진을 통한 시장 개방 지속

○ 1997년 WTO 가입 신청 이후 지적재산권, 관세법, 투자법, 수출입 요건 등을 WTO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등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13년 2월 WTO에 가입함.

-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1년 통합촉진법 추진 등을 통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2017년 4월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우선부문(유기농업, 교육 등)·낙후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수익세(profit tax)가 면제되는 한편, 부동산 개발 등 신규 양허사업에 대한 최대투자기간이 99년에서 50년으로 축소됨.

○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ASEAN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2016~2020년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라오스 정부는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2016년 4월
국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음.

- 동 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① 안정되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 추구 ② 경제·사회문화·환경보호 부문 간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 ③ 노동인구 기술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능력 강화 ④ 정치적 안정, 평화, 사회질서, 결속, 민주주의, 정의와 사회적 성숙 유지 ⑤ 주체 의식 있는 국제협력 확대 지속 등임.
- 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0년 빈곤률 10% 이하 달성, 최빈국 지위 졸업, 1인당 GDP 3,190 달러 달성 등임.

3. 대외거래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원유 등 수입 증가로 큰 폭의 상품
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경상
이전수지 흑자(2016년 37억 달러),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2016년 23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2016년에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

성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6.8%) 대비 다소 하락한 -6.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376	-1,178	-2,265	-2,664	-2,806
경상수지/GDP	-3.4	-10.0	-18.3	-18.4	-17.9
상 품 수 지	-756	-1,609	-2,464	-2,842	-2,971
수 출	2,264	2,662	2,769	2,705	2,881
수 입	3,020	4,271	5,233	5,547	5,852
외 환 보 유 액	722	875	1,043	901	...
총 외 채 잔 액	9,426	15,213	17,609	19,512	21,744
총외채잔액/GDP	87.4	128.4	140.2	141.5	145.2
D S R	10.8	11.9	11.6	20.1	21.1

출처: IMF, EIU, OECD

□ 수입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 높은 수준

○ 라오스는 전형적인 소비국가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소비재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구리, 금 등의 광물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38억 달러 규모의 Xayaburi 댐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관광 수입 및 재외국민 송금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지는 2013년 3.8억 달러에서 2016년 26.6억 달러로 확대됨.
 -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3년 -3.4%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 -18.4%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은 2016년 월평균 수입액 대비 1.2배 규모로 낮은 수준
- 수력발전과 광업, 개발사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2013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확대 추세임.
 - * FDI 유입(억 달러): 2.9('12년)→4.3('13년)→7.2('14년)→11.2('15년)→8.9('16년)
 -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0.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9.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 상품·서비스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5개월에서 2016년 1.2개월 수준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이며 대외지급능력은 취약

- 2015년 기준 총외채 중 48%는 양허성 차관이나,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으로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5년 140.2%에 달하였으며 2016년에도 외채 증가로 141.5%로 상승함. 또한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율도 2015년 290.6%에서 2016년 310.4%로 상승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원리금상환액이 2015년 7.0억 달러에서 2016년 12.6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1.6% 대비 크게 상승한 20.1%를 기록함.
- 단기외채는 2015년 8.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환보유액은 10.4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5년 말 1.17배에서 2016년 말 0.89배로 하락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IMF는 2017년 1월 보고서에서 라오스의 빈곤축소 노력과 거시경제 실적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대규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우려를 표하고 라오스 정부에 재정 긴축과 외환보유액 확충 등 개혁정책을 권고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라오인민혁명당(LPRP)의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

○ 1986년부터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임.

-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원들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수반인 총리,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을 겸임하는 집단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16.4월 분냥 보라쨌 대통령, 통룬 시슬리트 총리 선출

○ 라오인민혁명당은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 불안 가능성 내포

○ 도시 중산층의 성장에 따른 지역간 빈부격차 및 소득 불평등

심화*와 함께, 외국기업 앞 토지 제공시 원주민이 보상을 거의 못받는 경우와 광업·산림업·수력발전 투자를 위해 농경지를 몰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불만이 잠재되어 있어 향후 사회 안정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지니지수 추이: 34.9('97년)→34.7('02년)→36.6('07년)→37.9('12년)

- 정부는 식량 보조금 확대, 빈곤퇴치 계획 수립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규모 양허사업은 고위 관료와 연계된 경우도 흔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잠재되어 있음.

3. 국제관계

□ 몽족 강제송환 등 인권문제로 인한 서방국가와의 외교 갈등

○ 최초 탈북 청소년 강제 복송 및 몽족*(Hmong)의 강제 송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

* 고대 중국의 중·남부에 거주하던 묘족이 현재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민족

- 2016년 9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베트남전 당시 미국 폭격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화해관계를 모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청소년의 강제 복송, 태국에 밀입국한

몽족의 강제 송환 조치 등 세계인권단체, UN 등으로부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와의 밀접한 협력관계 지속

○ 라오스는 2016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인프라 공동 개발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대 라오스 제1위 투자국으로 70억 달러 규모의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완공 시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중국에 이어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대 라오스 2위와 3위 투자국이며 특히, 태국은 라오스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인근 국가들이 댐 건설,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등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중

- 또한, 2015년 10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자격 획득, 같은 해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인근 국가와의 사회·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황태도 정상적

- 라오스는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으며, 2017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Export Credit Agency)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9.4백만 달러 및 중장기 354.1백만 달러 등 총 373.5백만 달러로 연체액이 없어 외채상황태도는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낮은 소득수준, 높은 외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OECD 7등급 유지

- 정치적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GDP 대비 70% 내외 수준의 공공부채, 중국·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OECD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라오스는 국제신용평가3사의 미평가국임.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년 6월 22일 수교, 1975년 7월 25일 단교, 1995년 10월 25일 재수교 (북한과는 1974년 6월24일 수교)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6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6년), 이중과세방지협정('06년), 사증면제협정('09년), 항공협정('10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 5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7년 6월 말 누계 기준 4.3억 달러(신규법인 수 134건)를 기록함.

□ **교역 현황:** 교역규모는 1.5억 달러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무역수지 흑자 지속

○ 한-라오스 교역규모는 2016년 기준 1.5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등 수출로 1억 달러 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표 3〉

한 · 라오스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187	156	170	126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수 입	12	18	28	23	목재류, 칼륨비료, 기호식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8.5%를 기록한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음. 2014~15년 7% 대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16년 경제성장률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자본재 등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 등 서비스수지 및 재외국민 송금 등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2015년 18.3%에 이어 2016년에도 18.4%로 추정됨.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개방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2017년 3월 말 기준 OECD ECA 앞 연체액이 없고,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6년 말 5.2%로 낮음. 그러나 대규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말 외채규모가 총수출 및 GDP 대비 각각 약 310.4% 및 141.5% 수준으로 과중하고, 외환보유액은 약 9억 달러로 단기외채 대비 약 0.9배 수준에 불과해 대외지급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2 폰트, 200자 원고지 기준)
- 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changmin@koreaexim.go.kr

Tel : 02-6255-5691

- 기고 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